

인권정보자료실  
ROK1.77.22

# “ 연대와 전진을 위한 아름다운 만남 ”

## 사회포럼 2003 '연대와 전진' 자료집

“ 연대와  
전진을 위한  
아름다운 만남 ”

사회포럼 2003 자료집

인권정보자료실  
ROK1.77.22

사회포럼 2003 조직위원회

일시 : 2003년 2월 7일(금) ~ 2월 9일(일)  
장소 : 국립 중앙 청소년수련원  
주최 : 사회포럼 2003 조직위원회

후원 : 민중연대, 통일연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구대학교, 상지대학교, 한신대학교,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한겨레신문, RTV, Ctv(시민방송주), 월간시터즌, KTF, 동녘출판사, 한길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총서울본부, 불교TV, 노동일보

**주관단체** : 6월사랑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성남시민모임, 실업극복단체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동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  
운동연합,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참여단체**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다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사회부, 민주노동당,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당,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의 꿈너머,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www. sangji.ac.kr

“**쑥쑥**”  
**푸푸** 큰 리

햇님을 향해 피어난다고 해서 “해바라기”  
별님을 바라보며 맑게 피어나는 꽃 - 별바라기.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 마십시오.  
상지대학교가 당신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쑥쑥 자라는 꽃 -  
당신이 바로 “별바라기”입니다.



 **상지대학교**  
SANGJI UNIVERSITY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TEL (033) 7300-114

“ 연대와  
전진을 위한  
아름다운 만남 ”

**사회포럼 2003 '연대와 전진' 자료집**

**일시** : 2003년 2월 7일(금) ~ 2월 9일(일)  
**장소** : 국립 중앙 청소년수련원  
**주최** : 사회포럼 2003 조직위원회

**후원** : 민중연대, 통일연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구대학교, 상지대학교,  
한신대학교,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한겨레신문, RTV, Ctv시민방송(주), 월간시티즌, KTF,  
동녘출판사, 한길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OC), 한국노총서울본부, 불교TV, 노동일보



# Program Table

2003년 2월 7일부터 9일까지

시간/날짜	2월 7일(금)	2월 8일(토)	2월 9일(일)
08:00 ~ 09:00		아침운동 및 식사	아침운동 및 식사
09:00 ~ 10:00		쟁점토론 1부	전체토론 3부
10:00 ~ 11:00			
11:00 ~ 12:00		특별토론 (13:30까지)	공동선언문 채택 및 폐회
12:00 ~ 13:00	도식, 식사, 병배정		
13:00 ~ 14:00	개회식	점심식사	점심식사 후 예산
14:00 ~ 15:00			
15:00 ~ 16:00	전체토론 1부	전체토론 2부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 20:00	부문토론	쟁점토론 2부	
20:00 ~ 21:00			
21:00 ~ 22:00			
22:00 ~ 23:00	세계사회포럼 보고회	친교와 나눔의 시간	
23:00 ~ 24:00			

# 그날은

전체토론 1부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009	한국사회의 국가제도 정치의 변화와 사회운동		조희연
076	16대 대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정대익
093	진보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노희찬
100	우리시대의시대정신과 사회운동진영의 과제		정내연
110	상생의 정치와 그 의미		정면백
113	노동자의 힘 2003년 정세전망		고민택
전체토론 2부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140	민주화 이행과 한국사회운동의 과제		김상곤
154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준
171	노무현정권의 출범과 민중운동의 전망		박하순
181	2003년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신철영
184	사회운동과 문화적 관점		강내희
191	노무현정권하에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희수
197	지역운동에서 본 한국사회 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광식
201	16대 대선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최민희
전체토론 3부		우리의 정면과 상상하기, 활동가 나 돌아보기	
204	시민단체 조직 내 활동주체들간의 긴장과 반목, 그리고 소통과 민주주의		김은숙
209	남성중심적 문화 다시 보기		김은주
215	20대 활동가, 나의 오늘과 내일		장상미
218	30대 활동가, 나의 오늘과 내일		주제준
221	나와 운동의 행복한 만남		김경희
특별토론		아시아 반제평화운동의 탐색	
224	일본의 반제평화운동과 국제연대		Muto Ichiyo
227	한국의 반제평화운동과 국제연대		김광일
231	한국평화운동의 국제연대 현황과 과제		정경란
238	사회변혁을 위한 비폭력의 실천에 관하여		박성준
부문토론			
245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289	언론개혁과 안티조선운동
304	언론개혁과 안티조선운동	330	환경운동의 전략과 비전
347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한반도위기해법		
쟁점토론			
382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395	이주노동자운동과 한국사회의과제
407	국가기간산업의사회경제적역할과공공성강화방안	451	사법제도의개혁과제
483	대학지배구조어떻게바꿀것인가	500	DDA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방안
523	비정규노동문제의사회운동적의의와방향	530	성주류화를향한시민사회의과제와협력방안



# 사회포럼2003 조직위원회

## 공동대표자회의

조직위원장 오충일목사 6월사랑방 대표

공동대표

김민남 대구참여연대 대표 김상곤 교수노조 사무총장 김선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김세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김정현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혜성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목사 김홍선 전변련 의장 박승훈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영신녹색연합 대표 박은경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성유보민연련 이사장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충일6월사랑방 대표 유덕상민주노동총 위원장 직무대행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수봉실업극복단체협의회 대표 이필상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장영민민주사회정책연구원장 정연백여연 공동대표 정연산전농의장 조영효성남시민모임 공동대표 조희연학단협 대표 최열환경연합 사무총장 최병모민변 회장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홍근수저통협 상임의장 황민호 국가기관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수석부위원장 (가나다 순)

## 집행위원회

안병욱 학술단체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사무국

사무국장 : 진영중 민교협 사무처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분과위원회

기획위원회, 조직위원회, 재정위원회, 홍보위원회

## 주관단체

6월사랑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가기관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녹색연합,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족화해저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연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성남시민모임, 실업극복단체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국민운동연합,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 참여단체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다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사회부, 민주노동당,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인천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당,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의 꿈 너머,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전주교 인권위원회

## 후원단체

민중연대, 통일연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구대학교, 상지대학교, 한신대학교,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한겨레신문, RTV, Ctv 시민방송(주), 월간시티즌, 동녘출판사, 한길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총서울본부, 불교티비, 노동일보, KTF



## ■ 추진위원 명단

**6월사랑방** 박호성(회원) 양길승(운영위원) 최은순(운영위원) 한영철(운영위원) 황인성(운영위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리병도·강봉주·최인순·박혜경·육예경(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문영·이희원·전민용·신이철·정성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주영수·임상혁(노동건강연대) 엄석호·서홍관·정일용·김정범·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최문석·박용신·이경구(삼원의료실현을위한정년한의사회)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전환규(철도노조 위원장) 홍덕표(철도노조 사무처장) 김준석(가스노조 위원장) 배경석(가스노조 기획국장) 이호동(발전노조 위원장) 김순섭(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주영(전력노조 위원장) 엄창희(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 황민호(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김태진(공공연맹 부위원장)

**녹색연합** 박영신(공동대표, 연세대 사회학과) 박경조(공동대표, 대한성공회 신부) 김제남(사무처장) 손광훈(환경소송센터이사장, 변호사) 박오순(환경소송센터소장, 변호사)

**대구참여연대** 김민남·진수미·김문봉(공동 대표) 성상희(집행위원장) 김종철(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송인준(집행위원장), 김주현·류진석·신명식·장수찬(협동처장)

**문화계역을위한시민연대** 김정현(공동대표) 강내희(집행위원장, 중앙대 교수) 심광연(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원용진(정책기획위원장, 서강대 교수) 지금중(사무처장)

**민족화해저주통일협의회** 홍근수(상임의장) 문규현·전영세·김홍현·단병호(상임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회장) 이원영·강금실(부회장) 김선수(사무총장) 이유정(사무처장) 김석연(사무처장) 이찬진(공익소송위원회 위원장) 이석태(미군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연순(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갑배(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언섭(민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유보(이사장) 정상모·전영일(부이사장) 이완기(이사) 최민희(사무총장) 김철수·김동민·신태섭·김서중·김택수·최영목·양한열·주동왕·최용익(정책위원) 김은주(신문모니터위원장)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현상윤(언론노조 부위원장) 김상훈(언론노조 사무처장) 최문순(언론노조 전위원장) 박병완(방송기술인연합회 전 회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률(상임의장) 정광훈·노수희(공동의장) 한충목(집행위원장) 정대연(정책위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박상환(공동의장) 손호철(공동의장) 이민환(공동의장) 백수인(공동의장) 진영중(사무처장) 김누리(집행위원) 신광영(집행위원) 이남주(집행위원) 홍성태(집행위원) 유초하(충북대) 최영태(전남대) 최갑수(서울대) 권혁태(성공회대) 김광철(동아대) 고순희(부경대) 정해구(성공회대) 임정근(경희사이버대학) 김호기(연세대) 이영환(성공회대) 김창남(성공회대) 안상연(충북대) 오제명(충북지역회장)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최의팔·석원정(공동대표) 김해성(외국인노동자직업 소장) 이정호(공동대표, 마석살롱의 집) 이철승(공동대표,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

**전국교수노동조합** 황상익(위원장) 박기용(부위원장) 유제호(부위원장) 김상곤(사무총장) 정대화(조직실장) 이상백(기획정책실장) 노태구(사학비리고발센터소장) 김인재(정책위원) 김순태(서울제주지부장) 이현주(경기인천지부장) 김한성(강원지부장) 박노영(대전충남지부장) 전지용(광주전남지부장) 강남훈(한신대지회장) 고희석(국교협 회장) 주경복(감시) 이종호(전북대교수회부회장) 장상환(민노당 정책위원장) 유병제(대구경북지부장) 송주명(대협위원) 고갑희(한신대) 김운자(한신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의장) 문경식·이승렬·서정길(부의장) 박용식(사무총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덕상(위원장 직무대행) 김형탁(부위원장) 신승철(부위원장) 이항원(부위원장) 홍준표(부위원장) 이재용(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용식(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승원(공공연맹 위원장) 백순환(금속산업연맹 위원장) 금기승(대학노조 위원장) 황일남(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강승규(민주택시연맹 위원장) 윤영규(병원노련 위원장) 김영근(서비스연맹 위원장) 봉찬영(시설노련 위원장) 신학림(언론노조 위원장)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임성운(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원영만(전교조 위원장) 김종인(화물노련) 오길성(화학섬유연맹 위원장) 박유순(사무처장) 김태연(정책기획실장) 황명진(조직정책실장) 이희수(대외협력실장) 손낙구(교육선전실장) 권영국(법률위원장)

**전국빈민운동연합** 김홍현 김인수 장봉주 남경남 양해동

**전국실업극단체연대회의** 이수봉(집행위원장) 김홍일(정책위원장) 이상람(조직위원장)

**참여연대** 박상중·이상희·최영도(공동대표) 손혁제(운영위원장) 박원순(집행위원장) 김기식·박영선(사무처장) 차병식·김남근·장유식(협동사무처장)

**학술단체협의회** 조희연(상임대표) 안병욱·강정구·김교빈(공동대표) 신정완(운영위원장) 김귀옥(연구위원장) 박은홍(학술위원장) 김범춘(대외교류위원장) 김정인(홍보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상임공동대표) 정현백(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상희·정광지(공동대표) 박영숙(생협 이사장) 최명숙(사무처장) 유경희(가족과성상담소 소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승창(사무처장) 오관영(예산감시국장) 정선애(정책실장)

**환경운동연합** 이필클(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윤순진(에너지대안센터 이사) 윤준희(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선상규(강서·양천 환경운동연합 의장) 김호철(반핵특위위원장 변호사)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은경(공동대표) 조명래(정책기획위원장) 안면희(환경정의연구소장) 서왕진(사무처장) 오성규(정책실장)



전체토론 1

#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이천삼년 이월칠일  
오후 세시부터 여섯시까지

사회	안병욱	학술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카톨릭대
발제1	조희연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성공회대 한국의 국가·제도정치와 사회운동
발제2	정대화	전국교수노동조합 조직실장, 상지대 16대 대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3	노희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진보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토론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임정희	문화연대 시민지시문화센터 소장
	정대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책위원장
	김태연	민주노동당 정책기획실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균관대
고민택	노동자의 힘 중앙위원	

<전체토론1>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발제1

## 한국의 국가·제도정치와 사회운동

-민주화, 세계화 속에서의 국가와 사회운동의 변화1)

조희연 (학술단체협의회 회장, 성공회대 사회학)

###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의 지배와 국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운동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사회운동이 전개되는 투쟁전선을 3가지로 나누어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는 국가를 포함한 제도정치 변화에 따라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논의로서, 먼저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급적·사회적 적대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전선을 3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도정치 및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정치적·사회적 세력을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로 나누어 제도정치 변화에 따른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변화를 이러한 이념적 지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정치(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사회)의 내적 변화, 특별히 제도정치 구성세력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확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러한 이념적 구분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그것이 사회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국가 및 제도정치 변화와 합리화와 함께 '제도화'가 진전되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도전을 사회운동에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것이다. 먼저 한국전쟁 이후 50년대의 분단 상황을 간단히 서술하여 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국가의 사회적 토대를 서술한 후, 61년부터 87년까지의 개발독재국가 시대,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의 시기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야당정부 수립·IMF경제위기를 분기점으로 나누어 2개의 소시기를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1) 이 글을 작성하는데, 다음의 글들을 토대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조희연, 1998, "80·90년대 정치변동의 국가론적 성격",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조희연, 2002, "한국의 정치사회적 담론 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총론",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2002.9.28, 연세대학교 위당관; 조희연, 2003, "'제2기 민주화' 단계의 구조적 의미와 개혁담론의 방향", 2002 대선 교수네트워킹, 민교협, 학단협 외, 『2002 대선 평가토론회』, 2002. 12.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조희연, 2002, "'발전국가'의 변화와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변화: 한국에서의 발전주의의 성격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철학> 2002년 겨울호. 조희연의 홈페이지(<http://dnsm.skhu.ac.kr>)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관점과 관련하여 이 글은 필자의 전공영역인 국가론과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다. 아울러 시민운동이나 특정 사회운동을 염두에 두지 않고 포괄적인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임을 밝혀둔다.



자 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이러한 시기구분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를 첨부한다.

## 2. 국가 변화 및 사회운동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전제적인 이론적 논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세가지 점을 논하고자 한다.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3가지 전선에 대한 논의, 정치적·사회적 세력을 범주화하는 보수주의-자유주의-진보주의에 대한 논의, 개발독재국가의 성격 및 그것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근대 사회로의 이행은 여러 차원에서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봉건제적 경제 질서가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로 변했고, 정치적 차원에서는 절대주의 국가에서 근대 대의 민주주의적 국가로 전환되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신분제 혹은 전근대적 신민(臣民)사회에서 시민(市民)사회로 바뀌었다. 근대로의 이행 초기인 절대주의 시기에 상정되고 있었던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를 보게 되면, 시민사회는 경제적 약육강식의 사회이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반면에 국가는 반대로 보편 이익을 대표하면서 시민사회의 부정부성과 혼란, 분열을 조정·극복하는 존재로 상정되었다<sup>2)</sup>. 이러한 절대주의단계의 반反시민사회적 인식의 극복되면서, 정치적으로는 근대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체계로서의 자본주의와 시장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기는 물론 시민혁명이었다.

시민혁명을 통하여 전근대적 국가에 '포섭'되어 있던 사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엥겔스의 표현으로는 국가는 "사회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위에 군림하고 더욱더 그것으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권력"<sup>3)</sup>인데, 바로 이러한 국가로부터 사회가 최초로 독립한 것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국가로부터 사회가 독립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들이 국가에 종속된 인식을 가진 신민적 존재로부터 주체主體화되어 근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권력이 주권의 소재지로서의 시민들의 '계약적 행위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주체적 인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 시민사회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한편으로는 국가에 반하는 자율성을 갖는 '공적'인 영역을 담지—국가만이 공적 기구가 아니라—하는 사회로서의 성격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국가에 의한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경제적 관계를 맺는 부르주아적 사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이중적 측면을 고려하면, 시민혁명은 한편으로는 (절대주의적) 국가로부터 시장의 독립을 의미하는 '부르주아적' 시민사회의 탄생의 계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시민사회의 탄생의 계기였다. 시민혁명의 최대 화두인 자유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 사회적 자유라고 하는 이

2) 마틴 카노이, 이재덕 외 옮김, 『국가와 정치이론: 현대자본주의국가와 계급』, 한울, 1985.

3) Engels, Frederick.,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Y: International Publisher, p. 155..

중적 의미를 갖는다. 무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자유는 중세적인 신분제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자 동시에 일체의 생산 수단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근대 시민사회는 부르주아적 사회와 공적 시민사회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며, 근대적 개인은 부르주아적 개인과 공적 시민으로서의 이중성을 갖는다. 필자는 이 글에서 부르주아적 사회를 '시장 사회'라고 표현하고 공적 시민사회를 '협회의 시민사회'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을 따른다면 '광의의 시민사회'는 시장 사회와 시민사회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존재가 된 시민 및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체제가 바로 근대 민주주의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바로 국가에 대항하여 강화되어 온 시민사회의 힘을 전제로 하여 작동하는 정치 체제이다. 그런데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그 분리 위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고 그것을 억압하고자 하는 억압적 국가의 출현으로 인해 위협받게 된다. 권위주의나 좌익 전체주의, 파시즘과 같은 우익 전체주의의 출현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와 독립이라는 근대적 정치 원리를 부정하여 군림하는 국가,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이른바 '봉건화'를 낳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위협하는 국가의 억압성과 폭력성에 대항하는 것은 근대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민주주의적 투쟁의 핵심적인 측면이 된다. 이처럼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원리를 부정하는 '사회 위에 군림하는' 국가가 성립하게 될 때, 시민은 저항적 주체가 되며 민주주의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이런 투쟁이 전개되는 장을 필자는 '민주주의 전선'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전선에서 국가의 억압성과 폭력성에 대항하는 근대 이후의 투쟁과 근대 이전의 투쟁은 질적으로 구분된다. 근대 이후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그 분리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가 근대 정치 체제의 '표준적' 원리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 이전의 투쟁이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근대 이후의 투쟁은 국가의 폭력성과 억압성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된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근대정치체제의 표준적 원리로 확립되었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지도자조차도 자신을 민주주의의 실현자로 정당화하고자하는 데에서도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sup>4)</sup>.

그런데 시민사회는 국가에 반하는 동질적인 실체가 아니다. 시민사회는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이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적대와 균열에 의해 분열되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적대와 균열은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게 된다. 맑스주의의 핵심 명제와 같이, 근대 시민사회는 역사상 최초로 국가에 대립하는 사회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시민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인 관계로 부단히 분열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근대 시민사회는 국가에 대립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담지체로서의 성격을 떨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자의 생산 수단으로부터의 분리'와 '노동력의 상품화'를 통하여 적대적인 계급으로 분열되는 장으로서의 성격도 띤다. 맑

4) 박정희가 제3공화국 및 유신 체제의 이념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을 상기하자.



스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본질적 기초로서 시민사회의 경제적 관계를 해부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지배적 계급의 이해를 관철하는 계급적 국가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역으로 바로 이러한 국가가 자신의 보편적 외양을 통해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표상하는 시민 권리의 자유로운 외양에 의해 시민사회의 계급적 분열을 은폐하고 재생산하게 된다고 보았다.<sup>5)</sup>

이러한 계급적 행동주의가 표출되는 전선을 필자는 이 글에서 '계급 전선'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계급적 행동주의의 표출은 시장 사회에 대한 사회적·공적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계급적 행동주의의 강화로 인하여, 초기 단계에서 정치적 형식이자 절차였고 단순히 시민적·정치적 참여의 평등성을 의미하던—다른 의미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던—상태에서 사회 경제적 내용을 담는 상태로 발전해 가게 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정치적 형식에서 사회 경제적 차원으로 확장되게 되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통해 시장(시장의 제도적 형식)을 규정하게 된다. 예컨대 시장은 초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유 경쟁적 시장'으로 작동하였지만 20세기 후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국가 단계에서는 '공적으로 규제된 시장'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계급적 적대와 모순 외에도, 시민사회 내에는 다양한 사회적 적대와 모순 및 대립이 존재한다. 계급적 적대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적대와 모순을 둘러싸고 지배적 집단과 피지배적 집단 간에 다양한 투쟁과 갈등이 존재해 왔다. 이른바 '생활세계'의 여러 모순과 적대들은—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 의해서 조건지어지고 구조화되지만—계급적 적대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며 존재해 왔고 자연스럽게 이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이 벌어져 왔다. 환경, 소비 및 문화적 영역에서의 문제들, 인종 문제, 가부장제, 동성애, 인권 등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둘러싸고 갈등과 투쟁이 전개되어왔고 이 과정에서 개인 및 집단의 주체성이 고양되어왔다. 다양한 사회적 적대를 둘러싸고 피지배적 지위에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앞서 계급전선에서 표출되는 대중의 역동성을 '계급적 행동주의(class activism)'라고 한다면, 이러한 생활세계 전선에서 표출되는 역동성을 '시민적 행동주의(civic activism)'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생활세계의 모순들을 둘러싸고 시민적 행동주의가 표출되는 전선을 '생활세계 전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적 적대를 둘러싼 시민적 행동주의는 20세기 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후 계급 타협 체제 속에서 이른바 '갈등의 제도화', '갈등의 체제대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그 속에서 계급적 행동주의가 체제 내적으로 제도화되게 되면서—주목을 받게 된다. 1968년 5월 혁명으로 상징되는 구시대에 대한 반역적 흐름, 1960~1970년대 미국의 민권 운동, 반전 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시민적 행동주의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sup>6)</sup>. 이러한 저항 운동

5) 맑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을 통해 생산 및 교환 영역에서 작동하는 적대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을 상기하자.

에서는 이전에는 쟁점화되지 않았던 사회적 쟁점들과 모순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판성과 저항성이 표출되게 된다.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적대와 모순을 둘러싼 시민적 행동주의 역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사회적 확장이라는 취지에서, 다양한 사회적 적대 속에서 피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평적이고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사회를 둘러싼 3가지 전선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 전선이 존재하며, 시민사회 내의 계급적·사회적 균열을 중심으로 계급 전선과 생활세계 전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맑스주의의 핵심 테제인 국가의 계급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한다. 맑스주의에서 국가는 계급적으로 분열된 시민사회의 지배적 계급—경제적 지배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계급적 지배 도구가 된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의 확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편화를 통하여 국가가 시민사회의 지배적 계급의 이해에만 복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단적 힘을 조직화할 수 있게 했다. 맑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의 계급성은 국가의 본질적 성격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행동주의와 그에 따른 저항은 국가의 본질적 계급성이 매 순간의 현실적 국가성격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sup>7)</sup> 나아가 국가는 계급적 차별뿐만 아니라 이와 역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적대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은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계급적 모순과 결합하여 작동하게 된다. 국가가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보면<sup>8)</sup>, 생활세계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적대의 재생산에 있어서도 국가는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국가의 '본질적인' 계급성과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의 일체화는 계급적인 피지배 집단과 사회적인 피지배 집단의 저항에 의해서 통제되게 된다. 앞서 지적한 계급적·시민적 행동주의에 의해서 담보되는 힘에 의해서 국가는 그 본질적 계급성과 차별성이 제약받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근대 민주주의의 보편화는 다양한 사회적 적대 관계에서의 피지배적 위치에 있는 집단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게 된다.<sup>9)</sup> 예컨대 국가가 가부장적인 성격<sup>10)</sup>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

6) 로널드 프레이저, 안효상 옮김, 『1968년의 목소리—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박종철출판사, 2002.  
7) 조희연·정태석, 「한국민주주의변동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분석들」, 조희연 편,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2001; 조희연·조현연, 2002, 「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 희생: 총론」, 조희연 편, 『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희생』, 함께읽는책 참조.  
8) 니코스 폴란차스, 박병영 옮김,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백의, 1994.  
9) 물론 민주주의에는 자본주의적 관계에 의해 부단히 왜소화되고 허구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순적 결합 상태에 의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Bowles S. and H. Gintis,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cy Capitalism", Politics and Society 11, No. 1, 1983 참조). 이런 맥락에서 Wood는 민주주의를 허구화하는 자본주의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자본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democracy against capitalism'를 급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Wood, Ellen Meiksins, Democracy against Capitalism: Renewing Historical Mater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한다.



소한의 힘은 바로 반가부장적 투쟁과 저항성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생활세계의 다양한 적대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여 재생산되게 되나, 그것이 토대로 환원되지 않는 독자적인 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sup>11)</sup>.

이상과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볼 때, 근대 자본주의에서 시민사회를 둘러싼 대립 구도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 중 심으로 하는 사회적 집단 간의 대립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앞서 서술한 민주주의 전선, 계급 전선, 생활세계 전선이다. 그동안의 논의를 표로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시민사회의 제전선의 성격

	전선의 성격	갈등의 성격
민주주의 전선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민주주의가 근대의 표준화된 정치 체제 및 정치 원리로 정착.	국가의 권위주의·전체주의화,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봉건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투쟁. 시민사회의 계급 계층, 집단을 가로지르는 연합적 투쟁이 전개됨. 국가와 시장의 개혁을 위한 투쟁도 여기에 속함.
계급 전선	시민사회 내의 자본과 노동의 적대와 대립.	계급적 행동주의의 표출. 이러한 행동주의는 사회 민주주의적 흐름으로, 혁명적 공산주의의 흐름으로 표출.
생활세계 전선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사회적 적대와 모순을 중심으로 형성.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 혹은 주제적 활성화 이후에 비로소 쟁점화 됨. 이 전선을 둘러싼 다양한 시민적 행동주의의 표출.

이상과 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시민사회 내의 계급적·사회적 관계들은 사회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선발 자본주의 사회, 후발 자본주의 사회, 이른바 '후-

후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발전과 그것의 계급적·사회적 분열의 성격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시민혁명'의 부재, 전근대 사회의 미해체, 근대 사회의 혁명적 해체의 부재 상황에서 식민지 시대로 이행하게 되고 이러한 전근대적 유산의 불철저한 척결 위에, 이식된 민주주의, 이식된 법적·제도적 시민사회가 성립함으로써, 특수한 유형으로서의 경로를 밟게 된다. 그런 까닭에 서구처럼 부르주아적 시민사회와 공적 시민사회의 동시적 성립의 과정을 밟기보다는 공적 시민사회를 가능케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이식적으로 법제화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의 시장적 측면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지만, 그러한 법적 보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의 형성, 국가에 대립하는 시민사회의 강화 등이 전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허구화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것이 한국의 시민사회의 유형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여기서 법적·형식적 시민사회와 실질적 시민사회의 괴리를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시민사회 형성의 특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sup>13)</sup>. 한국사회와 같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같은 외생(外生)적 요인에 강제되면서 근대사회 및 '민주주의공화국'으로의 길에 들어선 사회에서는, '법적·제도형식적 측면에서의 시민사회'와 '실질적 시민사회'는 괴리되게 된다. 법적·형식적 시민사회와 실질적 시민사회가 괴리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혹은 근대사회 확립의 복잡성을 지적할 수 있다. 법적·형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헌법 제정 및 남한정부의 수립으로 주어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시민혁명을 통해서 확립된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법적·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헌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전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1929년에, 프랑스에서는 1944년에 여성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된 데 반해, 한국에서 1948년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서구에서 아래로부터의 참정권투쟁을 권리가 쟁취되어 온 것과는 달리 '후발주자'로서의 한국사회에서는 서구의 역사적 쟁취물이 '위로부터' 법적·형식적으로 이식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형식적 시민사회가 곧 실질적 시민사회로 동일시될 수 없다는 데 한국

12)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성립 시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필자가 볼 때 시민사회의 성립 시기는 형식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는 시기, 즉 해방 이후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 최장집 교수는 해방 공간에서의 '시민사회의 팽창'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 참조) 그러나 시민사회가 가능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력 관계, 즉 시민사회의 힘이 강화되어 국가에 대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의 관계에 실질적으로 도달한 시점은 1980년대, 특히 1987년 6월 민주 항쟁 전후라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의 실질적 성립 시기는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개념적·실제적 쟁점에 대해서는 유팔무김호기 편, 199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과 유팔무김정훈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한울, 참조.

13) 시민사회에 대한 국내의 논의에 대해서는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1)』(한울, 1995) 참조.

10) 여성 문제에 대한 국가의 이중성-억압적 기능과 후원적 기능-은(Eisenstein, Zila, "The Patriarchal Relations of the Reagan State", Signs Vol. 10, No. 2, 1984 참조) 필자가 볼 때, 국가 자체가 내재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해서 후원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민주주의적 공간을 활용한 피억압자-여성-의 투쟁을 통해서 국가의 친가부장제적인 억압적 기능이 통제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11) 여기서 자본주의 하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 간의 관계를 둘러싸고 계급적 적대가 중심적이라고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계급적 적대의 중심성을 인정하는 시각과 계급적 적대 환원주의적 시각을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자본주의 하에서 계급적 적대의 중심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 전선과 생활세계 전선의 독자적인 의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민주주의 전선과 계급 전선을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이런 점에서 밀리반드(『공산주의 정권의 위기에 관한 성찰』, 33쪽)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주의자들의 주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얻어진 민주적인 성과를 가장 단호하고 설득력 있게 수호하는 것이요, 자본주의의 결함을 가장 비타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본주의적 지배가 가한 속박에서 마침내 민주주의를 해방시킬 그런 사회 질서를 가장 잘 선전하고 주창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특수성이 있다. 이후 서술하겠는데, 이처럼 법적·형식적으로 확립된 시민사회는 50년대의 민간권위주의정권과 60년대 이후 군부권위주의정권을 거치면서 허구화되고 형식화되어갔다. 권위주의정권은 이를 허구화시키고 시민사회를 실질적으로 억압하고 무장해제 하면서 시민사회의 대립항으로서의 국가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억압은 시민사회의 실질적 내용을 조직적·행위적으로 담보하는 사회운동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났다. 형식적으로 각종 정치적·시민적 권리는 보장되었지만, 이후 각종 법률 개악 및 현실에서의 억압을 통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허구화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무력화되고 허구화되는 시민사회가 '실질화'되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성장을 통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를 통해서였다.

다음으로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성격변화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사건을 겪으면서,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계기적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국의 지배와 국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재적·미래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현재적·미래적 관점에 따라서 87년 이후의 변화를 규정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60년대부터 87년까지 존재하였던 독재체제를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로 규정하고, 87년 이후의 변화를 '자본체적(민주주의)국가'로의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으로 규정한다.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은 군부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후발 산업화(late industrialization)(Gerschenkron, A., 1962) 혹은 '후-후발 산업화(late-late industrialization)(Hirschman, A., 1970)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는 독점적 자본주의가 압축형적으로 확립되어왔다. 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바로 이러한 후발 독점자본주의의 형성이라는 토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상부구조적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후-후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국가들이 출현하였다. 권위주의국가, '군부파시즘', '신식민지파시즘' '중속파시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신중상주의적 권위주의국가'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Listian warfare state)<sup>14)</sup> 등은 초기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국가형태와 기능을 제시하는 개념들이다. 이것들은 '후-후발 산업화' 혹은 '신식민지적 근대화'(post-colonial modernization)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 및 기능상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한 일종의 '중

14) Hee-Yeon Cho and Bob Jessop, 2001, "The Listian Warfare Stat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in the East Asian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and Accumulation Regime in South Korea and Taiwan", Prepared for the workshop, In Search of East Asian Modes of Development: Regulationist Approaches', Tunghai University, Taichung, 19-20 April, 2001.

범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후-후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현상하였던 이러한 특수한 국가는 7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자유화, 공고화<sup>15)</sup> 등으로 지칭되는 정치변동을 통해서 상이한 국가형태와 기능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80년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와 신식민지파시즘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의 합리적 핵심은 바로, 위기적 모순을 내장하면서--당시에는 혁명적 위기로까지 인식되었음--자기전개를 하고 있었던 제3세계 초기산업화 단계의 국가 주도적인 정치경제체제였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표출되었던 혁명적 위기를 극복 하면서 이제 초기산업화단계를 지나, 이른바 '중진자본주의'적인 토대 정착에 상응하는 상부구조적 변화를 경험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이행의 구조적 의미이다. 80년대 중반 이후의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 역시 위기가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순과 위기를 잉태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경험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가지 더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민주주의 이행은 단순히 국내적 맥락에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맥락, 혹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라고 하는 세계체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행의 복잡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거시역사적 이행의 관점에서 볼 때, 후후발 산업화국가들--특히 이른바 신흥공업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국가형태를 "개발독재적 '예외국가'(developmental dictatorial exceptional state)"로 파악하고 그것의 형태변화를 자본주의적 '정상국가(자본체적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으로 파악한다<sup>16)</sup>. 이른바 '민주주의이행'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상부구조적 변화를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사회적 투쟁 혹은 계급적 투쟁에 매개되면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normal state)로 변화해가는 것이다<sup>17)</sup>. 물론 이는 대단히 불안정하며 모순적이고 다시 위기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단지 한국의 경우 87년을 전기로 하여 이러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을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는

15) 민주화, 자유화, 공고화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inwaring, G. O'Donnell and J. S. Valenzuela, 1992,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otre Dame: Uni of Notre Dame Press.

16) Poulantzas, N., Fascism and Dictatorship, London: New Left Books, 1974; Jessop, Bob, 1985, Nicos Poulantzas: Marxist Theory and Political Strategy, London: Macmillan 참조.

17) 여기서 두가지 점을 전제하여야 한다. 첫째는 여기서 예외국가와 정상국가라는 규정은 정권교체의 국가형태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이지, 국가형태의 특수성을 지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예외국가나 정상국가는 모두 천민적이고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채로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천민적인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일정한 합리성을 갖으나 여전히 천민성을 내장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이행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여기서 정상성은 현재의 한국국가가 '정상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대 이후 인류사적 변화를 통해 정착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적 '표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근대에 이르는 민중들의 정치적 투쟁은 자본주의적 토대에 상응하는 상부구조로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를 하나의 표준적 형태로서 '쟁취'하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 서는 상부구조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최소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이념형적 표준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전제한다. 박정희가 자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했던 것을 상기할 수 있다.



일정 시점에서 위기를 맞게 되고 여기서 혁명이나 수동혁명이나의 국면을 지나 한국의 경우 수동혁명의 경로를 따라 자본제적 민주주의국가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는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정확하게는 동아시아적 유형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적 특수성과 아직도 천민적 성격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제적 국가로서의 지배적인 성격을 갖는 국가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행의 과정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맥락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한국적·동아시아적 특수성과 결합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국가의 '체제'적 한계에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세계 군부독재, 서구의 파시즘 등이 예외국가의 형태로 거론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국가는 부르주아민주주의적 형태 속에서 지배계급으로 선재(先在)하는 자본가계급의 '계급적 도구'로서 작동하게 되는 '정상국가'와는 차별화된다. 현재의 한국의 '부르주아'적 국가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며 부분적으로는 권위주의로의 회귀 가능성도 갖는 것이기는 하나, 탈예외국가화의 거시역사적인 흐름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정상국가가 부르주아헤게모니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국면에서 출현하는 반면에 예외국가는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응하여 출현한다(Poulantzas, N., 1973: 293; 1974, 57-59). 그런 점에서 정상국가는 지배의 두 기체로서의 강제와 동의 중에서 전제가 지배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예외국가는 물리적 억압과 강제가 지배의 주요한 기체가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상국가와 예외국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B. Jessop, 1985: 94-95; 1990: 64-66). 첫째 정상국가가 보통선거권 및 경쟁적인 정당제도를 갖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예외국가는 선거의 원칙을 중지시키며 다원적인 정당체계를 제거하게 된다. 둘째, 정상국가에서는 권력의 이전이 제도적인 틀 내과 '법의 지배'의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나 예외국가에서는 이것이 중지된다. 셋째, 정상국가에서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사적인'(private)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인 통제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갖게 되나, 예외국가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억압적 국가기구의 통제에 복속되어 있으며 진정한 자율성을 박탈당한 채로 존재하게 된다. 넷째, 예외국가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와 억압적 국가기구 간의 더욱 높은 유착으로 인하여 억압적 국가기구 내의 여러 권력들 간의 형식적 분리가 오히려 축소되게 된다. 반면에 대의민주주의적 제도들에 기초한 정상국가에서는 계급 간의, 분파 간의 갈등의 '환기(換氣)에 기여하기 때문에 헤게모니의 유기적 순환(organic circulation)과 재조직화를 가속화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87년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사회적 갈등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정상성'의 확립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로부터 수동혁명적 이행을 시작한 이후에, 다시 혁명적 위기를 맞을 수 있으나 87년 이후의 과정은 큰 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제적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국면에서 앞서 서술한 민주주의전선, 계급전선, 생활세계전선은 예외적 성격이 탈각되면서 보다 전형적인 자본제적 민주주의의 성격에 근접해 간다고 생각된다. 즉 이행국면에서 3가지 전선에서 쟁점화되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양

한 사회적 적대의 문제들은 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예컨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고유한 시장의 힘에 의해 허구화되며, 다양한 사회적 적대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재생산되게 된다. 따라서 이행국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함에 있어, 제3세계 산업화의 특수성의 관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일반성의 관점'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포스트-개발독재적 예외국가로의 변화의 성격은 다양할 수 있다. 이행은 유형론적으로 볼 때 '아래부터의 혁명적 경로'와 '위로부터의 타협적 경로'로 나눌 수 있다. 민주주의이행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길'과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길'로 나눌 수 있다<sup>18)</sup>. 후자의 경로는 그람시적 표현에서 보면 '수동혁명'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을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수동혁명적 이행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수동혁명이라는 것은 능동혁명에 대응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수동혁명'이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으로부터 통치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이 자기변혁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된다. 수동혁명은 대중들이 정치경제제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즉 피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이 지속적으로 국가권력을 재조직화하는 행위가 된다. 물론 이러한 수동혁명의 기본동력은, 지배 자체에 대한 민중들의 '동의를 철회'로 초래된 지배의 위기이다. 이런 점에서 수동혁명은 '지배의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권력의 재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수동혁명의 대상(對雙)인 능동혁명--비록 그것이 좌절된다고 하더라도--수동혁명의 기본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실패한 '능동혁명'의 여진이 소멸하지 않고 87년 이후 수동혁명의 동력으로 존재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국가권력의 재조직화와 과정에는 특별히 제도정치적 변화가 중요한데, 지배정당이 저항운동의 개인적, 집단적 분파를 흡수하는 '변형주의'(transformism)<sup>19)</sup>적 재편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와 층위에서 지배 및 그 물적 기구로서의 국가권력의 '개량적' 혁신이 나타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수동혁명은 예외국가 속에서 '예외'적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국가-사회 관계, 국가-자본관계, 자본-노동관계, 사회-노동관계의 재편을 포함하게 된다. 즉 강화되고 재활성화된 사회 및 노동, 자신의 축적 기반을 강화하고 강력화된 부르주아지를 전제로 하여 사회적 제관계의 변형이 시도되게 된다<sup>20)</sup>.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일종의 '기동전'적인 형태로

18)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3장.

19) 변형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Gramsci, A., 1971,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p. 58; Jessop, B., 1982, The Capitalist State, Oxford: Martin Robertson, p. 150.

20) 예컨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본형성적 역할로 일체화되었던 국가는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투쟁의 진전으로 인하여 그 기능수행의 형태가 변화되게 된다. 국가의 자본-노동관계의 개입에 있어서도 --자본질서에 대한 노동의 복종을 위한 국가적 개입이 '위기의 국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자



서의 '예외국가'는 수동혁명적 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부르주아적 지배형태로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의 과정은 결코 일회적인 과정이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거시역사적인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동혁명적 과정은 결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갈등적인 과정이며 지배의 혁신과정에서 하나의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문제를 촉발하는 복합적인 과정이 된다. 수동혁명은 계속적인 사회적 투쟁 혹은 계급투쟁적 과정 속에서 진행되며 계급적 격돌 속에서 진행된다. 단지 그러한 변화의 주도권이 지배계급에게 있다는 데 수동혁명의 기본특징이 있다.

87년 이후의 민주화의 진전과 그 이후의 수동혁명적 개혁의 과정에서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문제들이 점차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전형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의 시장의 '예외적인' 천민성과 국가의 '예외적인' 반민주주의적 억압성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동혁명적 변화의 과정에서 지배블럭이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실패한 능동혁명이 강제하는 개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수동혁명의 과정이 다시 급 혁명적 위기국면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반공주의적 프레임이 부여하는 거시적 한계, 시민사회의 보수성,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지역주의적 왜곡 등으로 인하여, 지배 자체의 혁명적 위기로 발전하기 보다는, 자본제적 민주주의국가로 전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3가지 투쟁전선의 문제가 민주주의전선의 경우 국가의 예외적인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확장을 쟁점으로 하는 전선으로 변화하게 되며, 시장의 예외적인 천민성과 반민주성을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시장의 합리성과 합리성을 쟁점으로 하는 상태로, 생활세계 전선의 경우 사회적 적대의 폭력적 억압과 주변화를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사회적 적대의 제도화와 체제내적 쟁점으로 하는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 이것은 투쟁전선과 쟁점이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계급적·정치적 지배질서의 소멸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제적 민주주의'적 지배질서의 형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필자가 여기서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변화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87년 이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87년 이후의 변화과정은 상당부분 예외국가의 정상화--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과정에 있고 이러한 '정상화'를 추동하고 보다 개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운동을 지배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이러한 정상화 차원 자체는 분명 87년 이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중운동도 이러한 과제에 복무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는 국가 및 지배질서라는 것은 자본제적인 것이고 새로운 계급적·사회적 적대를 내재한 체제라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의 정상화

본 자체의 '독자적인' 지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를 추동하고 실제 이것이 실현되면 될 수록 사회운동은 그러한 정상화를 뛰어넘는 과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화를 과제로 싸우면서도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들은 제도정치와 합리화, 국가 및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제도화된 통로의 확장(제도화)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질서의 왜곡성의 극복과 다원적 정치질서의 확립과 합리화, '법의 지배' 원칙의 확립, 시민사회적 공공영역의 정착과 역할 확대, 민중진영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공간의 확장 및 개혁적 국가기구들의 출현(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부의 설치 등)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은 시민사회의 압력과 저항에 의해 촉진된다. 자본주의적 정상국가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정치사회의 확립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모순과 이슈들이 일상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수렴되고 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이 사회적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수동혁명적 경로를 통해서 정착되어가게 된다.

제도정치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의 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변화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를 정치적·사회적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기 위해서이다. 정치적·사회적 세력의 유형화와 구분에는 다양한 척도가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환경문제에 대한 태도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혹은 동성애, 인권문제,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에 대한 태도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념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수주의-자유주의-진보주의의 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각각의 지향내부에서는 다시 온건지향(moderate)과 급진지향(radical)이 존재하게 된다.

예컨대 87년 이후 지역주의 정당구도 하에서 김영삼으로 대표되는 과거 통일민주당은 '온건 자유주의' 정파로 파악되며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평화민주당 및 국민회의는 '중도자유주의' 정파로 파악된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온건보수주의 정파(자민련)와의 연합 속에서 '중도(보수)자유주의' 정파가 집권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부의 성격을 지배정파의 성격에 의해 규정한다면 '중도 자유주의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투쟁전선과 사회운동의 분석적 설정은 국가의 변화, 특별히 정부(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복합체)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것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가 영역 중 제도정치영역(정치사회)의 내적 구성의 변화는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에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도정치는 민주주의전선과 계급전선, 생활세계전선의 쟁점들이 표출되고 민주주의전선에서의 각 사회적 주체들이 정치적(집단)주체로 반영되어 각축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전선에서의 쟁점들은 직접적으로 정부정책에도 반영되지만 제도정치(각 정당의 정당정책 등)의 변화를 통해서도 실현되게 된다.

지배블럭, 제도정치,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표2> 국가, 제도정치, 사회운동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이념의 분포

	극우보수 지향 혹은 정파	자유주의적 지향 혹은 세력	진보주의적 지향 혹은 세력
국가 및 국가관료	극우보수주의지향, 온건보수주의지향	온건 자유주의지향, 중도 자유주의지향, 급진자유주의지향	
제도정치	극우 보수주의 정파, 온건보수주의 정파	온건 자유주의정파, 중도 자유주의정파, 급진자유주의정파	온건진보주의 정파, (급진진보주의 정파)
사회운동	극우보수주의지향, 온건보수주의지향	온건자유주의지향, 중도 자유주의지향, 급진자유주의지향	온건진보주의 지향, 급진진보주의 지향

후술하겠지만,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 국가 및 제도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대단히 제한되게 된다. 특별히 합법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적·사회적 세력이 대단히 제한된다. 그러나 이후 민주주의이행의 과정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확장되게 그만큼 비(非)합법적·반(半)합법적인 (시민)사회 영역에 존재하여야 했던 자유주의적 세력이나 진보주의적 세력들이 합법적인 공간으로 포섭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세력의 확대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즉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적·사회적 세력들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은, 87년 이전까지는 ‘보수주의의 극우화’ 자유주의의 어용화, 진보주의의 소멸과 비합법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고, 60·70년대에는 “극우 보수주의와 발전주의와의 결합, 자유주의의 분화(어용적 자유주의와 저항적 자유주의화), 진보주의의 새로운 출현”으로 특징지울 수 있고, 80년대에는 “극우보수주의의 분열, 저항적 자유주의의 확산과 진보주의와의 결합, 진보주의의 급진화와 전투화”로 특징지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87년 이후는 “보수의 합리화” 자유주의의 진보주의로부터의 독자화 및 개혁주의화” 진보주의의 분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sup>21)</sup>.

### 3.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에서의 국가와 사회운동-민주화·세계화의 맥락에서의 국가와 사회운동의 변화

#### 1)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의 국가·투쟁전선과 사회운동-‘배제의 정치’와 시민사회

2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조희연, 2002, “한국의 정치사회적 담론 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총론”,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발표논문, 2002.9.28, 연세대 위당관.

#### 의 저항적 활성화

19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는 독특한 국가-시민사회 관계 위에서 가능하였다.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의 정치·사회적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조건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한국 전쟁에 이르는 시기는 민족 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전면적인 ‘계급적·사회적 투쟁기’였는데, 이것이 분단으로 귀착되면서 극단적인 극우반공주의 사회가 남한에 형성되게 되었다. 필자는 이를 ‘반공규율사회’<sup>22)</sup>로 개념화한다. 반공규율사회란 반공이 일종의 의사(擬似) 합의로 존재함으로써 국민적 통제와 규율의 주요 기반이 되는 극우 반공주의적 사회를 의미한다. 반공규율사회는 시민사회의 반공주의적 왜곡화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는 바로 이러한 반공규율사회적 조건 위에서 성립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국가는 반공규율사회적 조건 위에서 그것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것을 ‘혁신’하여 유지된다. 반공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에 대립하면서 스스로를 지킨다고 하는 ‘방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1960년대 이후의 개발 독재 체제는 개발 혹은 성장이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치를 설정하고 그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시민사회를 ‘동원’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초기의 조건이 정치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변화하게 되고, 점차 균열되어가게 된다. 개발독재 하에서 억압되고 독재 논리와 성장 논리에 의해 포섭되면서 허구화되고 수동화되어 있던 시민사회는 개발 독재의 모순-개발의 모순과 독재의 모순-에 대항하면서 점차 저항적으로 활성화되어가게 된다. 이처럼 저항적으로 활성화되는 시민사회는 한편으로는 독재 국가의 억압에 저항하고 동시에 천민적인 시장(및 자본)에 저항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 혹은 민중운동이었다.

개발독재국가의 위기를 구성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는 3가지 차원으로 표출되었다. 먼저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독재적 예외국가에 대한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의 활성화였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의 과정은 시장 및 자본의 성장에 조응하는 계급적 운동의 출현 및 성장의 과정이었다. 셋째, 개발독재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의 과정은 개발에 따른 생활세계의 모순에 대응하는 운동들의 출현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세계의 모순에 대응하는 다양한 운동들은 그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반독재 운동의 일부로서 파악되었다.

이러한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의 정점이 바로 1987년 6월 민주 항쟁이다. 1987년 6월에는 1960·1970년대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하여온 예외국가의 총체적 위기 국면이 조성되게 된다. 시민사회의 총체적 저항에 직면한 독재적 예외국가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22)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제1장, 제2장 참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의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운동의 관계를 본다면, 과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상황 하에서는 보수주의정당의 장기집권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수주의는 극우반공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고, 제도정치 영역이 극단적으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현상이 극단적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반독재 사회세력이 연합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sup>23)</sup>. 이러한 현상을 필자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의 사회운동의 '구심력적 심화'<sup>24)</sup>로 표현한다. 이것은 제도 정치로부터 배제된 저항적인 자유주의 세력(온건 야당 세력)과 장외 사회운동 세력의 결합,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급진적 저항 운동 세력의 등장 및 사회 운동 내에서의 계급적 지향의 분화, '급진적 저항 운동 세력의 해체모니하에서 다양한 저항 운동들의 반독재투쟁으로의 수렴'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앞서 서술한 3가지 전선이 반독재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의 국가와 사회운동의 변화

### (1) 1987년 이후 변화의 성격--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수동혁명적 변형

이러한 '후-후발 산업화'를 지향하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는 70년대를 지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그러한 성장체제 하에서 '효율적으로' 진전된 산업화 자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동원체제의 모순에 대응하는 민중적인 정치적 저항의 발전을 통해서였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서 변형을 강요당하게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먼저 예외국가를 가능하게 하였던 계급적 조건 상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먼저 산업화 그 자체의 진전으로 인하여 축적기반을 안정화하게 된 부르주아계급의 성장을 들 수 있다. 국가는 자신이 '계급적 도구'화되어야 하는 강화된 지배계급을 대면하게 된다. 둘째, '무장해제'되었던 노동계급이 재활성화되고 민중부문이 저항으로 동원화되게 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통합화의 방식이 더 이상 효용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정상'국가적인 형태가 불가피하게 되는 동력이 된다. 부르주아민주주의적 '정치'가 더욱 중요한 계급적 장치로 부상하게 된다<sup>25)</sup>. 세계 자본 자체의 '형성'을 위하여 물질, 인적 자원의 총동원적인 '신중상주의적' 정책은 더 이상 자본 일반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자본과 국가-사회 관계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다. 일종의 '신중상주의적 권위주의' 국가는 이

23) 조희연 편,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참조.

24) 조희연, 1998,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13쪽.

25) 폴란차스는 일찍이 "왜 부르주아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위해 자본주의국가라는 매우 특별한 국가장치를 가지는가?" "왜 부르주아는 근대 대의제국가라는 틀에 의거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바 있다.(Poulantzas, N., 1978, State, Power and Socialism, 니코스 폴란차스, 박병영 옮김,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백의, 1994). 결정요인은 결국 기존의 정치적 지배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급적 투쟁 및 사회적 투쟁의 발전으로 인한 지배의 위기가 될 것이다.

계 개입양식의 변화, 더욱 넓은 의미에서 경제와 관련된 국가기능의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넷째,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도시 노동시장이 계속 절대적 팽창을 했었고 이는 '성장의 분배'를 통하여 각 계급계층들의 성장체제에 대한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건은 후기에 오면서 변화하게 된다. 성장 혹은 성장의 위기를 둘러싼 각 계급계층의 이해관계가 조화되지 않게 되면서(예컨대 농민층의 이반 등) 예외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기반이 붕괴하게 된다.

예외국가를 가능하게 하였던 정치적, 계급적 조건이 이처럼 소멸하게 되면서, 예외국가는 --파시즘적 억압의 강화라는 '우회'(전두환 정권)를 거치면서도--정상국가로의 변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정상국가로의 변형이 바로 이른바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이행이 되는 것이다.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민주주의 이행은 국가의 정치적 형식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 즉 일종의 보호주의적 발전주의가 개방형 발전주의로 변화하게 되며, 이제 자신의 기반을 확충한 자본과 시장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시장자율형 발전주의'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예외국가의 변형은 사회적 투쟁 및 계급적 투쟁의 매개를 통하여 상이한 경로를 밟을 수 있었다. 일종의 '신식민지적 근대화'를 추동하는 개발독재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국가는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 예외국가적 지배블럭과 민중블럭의 일종의 '결전'의 시점이었던 87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민중블럭이 정치변동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그러한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은 협애화되고 '수동혁명'적인 방식을 통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발전이 지배적인 것이 되게 된다. 물론 이는 이행을 '보편성'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본주의적 '정상' 국가는 동아시아적 특수성, 한국적 특수성,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에 의해 규정되는 '정상'의 왜곡 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사회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sup>26)</sup> 경로를 따라, 구 지배 세력의 이니셔티브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타협적 이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성격도 바로 이러한 정치 변동의 성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개발독재적 예외국가는 결정적으로 파괴되거나 해체(dismantling)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transformation)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87년 이전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표상하고 있었던 '발전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해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속에서, 한국국가와 사회의 발전주의적 지향은 지속되면서 발전주의의 지향만이 변화하게 된다. 즉 발전주의가 기초가 유지하면서, 그것의 관철 방식이 국내외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의 하나는 물론 제도정치와 정치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정치가 정상화되는 것은, 왜곡된 정당질서가 극복되고 '다원적' 정치질서가 성립하며, 이른바 '법의 지배'가 일정하게 관철되어가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들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정착되어가는 것을 포함한다. 자본주의적

26)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제3장 참조.



정상국가의 확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제도사회의 확립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모순과 이슈들이 일상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수렴되고 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이 특정한 시점에 확립되는 것도 아니고 일거에 완전하게 확립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회적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거시역사적 과정으로--수동혁명적 경로를 따라--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수동혁명적인--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이 세계화, 더욱 정확하게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맥락에서 전개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새롭게 성립하는 '민주정부'의 성격이 국내적 세력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적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와 세계화의 결합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자는 민주화를 이중적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화의 과정이며 동시에 경제적 자유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수반되게 된다. 정치적 자유화란 정치적으로 과거의 독재적 억압정책을 자유와 자율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자유화란 경제적으로 국가에 의한 시장통제와 기업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저항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서술한 시민혁명의 이중적 성격과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다.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의 이중적 과정이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정확히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자유화는 과거 독재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와 시장의 자율화를 의미하며,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구체제의 비민주적 성격, 국가주도성에 대한 개혁을 수반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시장자유주의의 확대로 나타나게 된다.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관철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규정되면서 신자유주의적 버전(version)의 경제적 자유주의로 실현되게 된다. 만일 60·70년대 복지국가적 맥락에서 민주화가 실현되었다면 민주정부의 정책의 성격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신자유주의에 의해 경제적 자유화의 결과가--시장의 공적·사회적 규제라는 과제는 쟁점화되기가 어렵게 되고--보다 시장만능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시장만능주의로 표출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적 자유화를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 자유화에는 ①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통제 약화(자율화)와 ② 시민사회적 요구의 선택적 수용의 증가(제도화<sup>27)</sup>)가 포함되며, 경제적 자유화에는 ③ 국가에 의한 시장통제의

27) 선택적 수용과 제도화는 통상적인 민주화이론에서는 민주적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의 한 측면을 지칭한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갈등적인 제 정치·사회 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제도적 규칙으로 정착될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고화는 단순히 선거규칙의 정착뿐 아니라 과거에는 거리의 투쟁을 통해 표출되고 수렴되었던 요구들이 제도적인 통로를 따라서 표출되고 수용되는 '제도화'를 통해서 가능해진다(Mainwaring, G. O'Donnell and J. S. Valenzuela, 1992,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약화(시장자율화)와 ④ 국내시장의 폐쇄적 통제 약화(개방화)가 포함된다.

<표 3> 87년 이후 정치적 자유화 및 경제적 자유화의 변화

	이위특성	성격
정치적 자유화	자율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억압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 통제의 약화,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 시민사회의 정치적 자율화
	제도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개방성 증대이며 동시에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는 제도적 통로와 공간의 형성 및 확장
경제적 자유화	시장자율화	이전의 국가 주도적인 방식에서 시장자율성 증대, 민영화 확대, 노동시장의 정치적 제한 등의 극복
	개방화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시장의 진입 확대

정치적 자유화는 권위주의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억압을 약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공간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거기에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개방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실현되는 제도적 통로와 공간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축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사회운동을 '체제 내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 이행과정은 민주화를 이용하여 지배를 안정화하려는 흐름과 민주화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저항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흐름의 각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화의 과정은 이미 80년대 후반 이후 시작되었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구현하고 있던 보호주의적·국가주도적인 발전주의는 80년 전두환 정권의 성립 이후 개방주의적·시장자율적인 발전주의로의 전환을 시작하게 된다.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민영화와 개방화는 바로 1970년대까지 시행된 개발독재국가의 경제 정책적 지향의 변화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기존의 보호주의적 발전주의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1960년대 이후 발전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자본이 이제 기업경영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들의 요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개방화는 개발독재국가적 성장 드라이브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자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발전주의를 계승하면서<sup>28)</sup> 발

Comparative Perspective, Notre Dame: Uni of Notre Dame Press).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사례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서미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제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28)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시민적, 정치적 활동 공간을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 위에서 발전국가의 지향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시장주의적, 개방주의적 발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발전주의는 소멸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시민사회가 발전국가와 시장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시민사회 내부의 노동자 계급도 이를 극복하지



전주의의 질적 성격의 변화라는 점에서 구발전주의에 대비되는 신발전주의(neo-developmental regime)로 표현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개발지향적인 발전주의국의 변형은 1987년 이후 6공화국과 김영삼 정부를 지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철되게 된다. 6공화국부터 시작된 UR 협상이나 김영삼 정부하에서의 UR 협상 타결 및 WTO 체제의 출범 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시장주의·개방주의적 발전주의로의 변화는 보다 가속화되게 된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갖게 되면서,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주의·시장주의적 개발주의가 관철되게 된다. 세계화라는 담론은 바로 이러한 문민정부의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60·70년대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행사하고 있었던 국가 주도성은 '양적으로' 보면 확실히 약화되게 된다. 국가 이니셔티브는 한편으로는 저항적 시민사회의 도전에 의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도전에 의해서 약화되게 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특혜 지원을 받으면서 고속성장한 시장과 자본의 입장에서 과거와 같은 강력한 국가 개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발전국의 권위주의적 성격에 저항하는 시민사회는 국가의 무소불능의 힘을 비판하는 저항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힘이 약화되면서 강력한 국가 개입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국가 주도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된다. 노태우 정부 시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두드러지게 된다. 시장주의적 이데올로기, 경제 자율성, 민간 부문의 자율성에 대한 담론은 경제에 대한 국가 주도성을 약화시키면서, 자본과 시장의 자율성과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발전주의 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은 금융에 대한 국가 통제권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국가의 금융 통제권은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일정한 자율성을 갖게 된 자본이 직접 국제 금융 시장으로부터 민간 금융을 유치하게 되면서 국가의 금융 통제는 더욱 약화되게 된다. 물론 IMF경제위기 이후 국민정부의 성립과 더불어 일정하게 국가이니셔티브가 회복되기는 하지만, 70년대까지와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국가이니셔티브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적 행위'로서의 국가개입을 정당화하게 된다.

경제적 자유화의 과정은 정치적 자유화가 가속화되는 '민주정부' 하에서 더욱 촉진되게 된다. 경제적 자유화의 정치적 조절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정치적 정당성 때문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자유화를 촉진하는 '민주정부' 하에서 경제적 자유화는 더욱 촉진된다. 물론 이것은 세계화의 촉진적 영향 하에서이다. 세계화의 흐름과 결합되면서 '민주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경제적 자유화를 가속화하게 된다. 어떤 점에서 민주정부 하에서, 70년대까지의 중상주의적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로의 전환이 나타나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9)Cho, Hee-Yeon, "The Structure of the South Korean Developmental Regime and Its Transformation",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 1 No.3. Dec, 2000 참조.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영향 속에서 관철되는 경제적 자유화에 따른 새로운 모순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영향 하에서 경제적 자유주의화의 정책들은 시장주의적 구조조정, 민영화, 개방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율화 등으로 표출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이전 보다는 더욱 공적 부문의 축소, 고용의 불안정화, 비정규화, 소득불평등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화의 촉복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sup>30)</sup>.

(2)1987년 이후 투쟁전선과 사회운동의 변화

그럼 87년 이후 국가의 수동혁명적 변화의 과정에서 투쟁전선과 사회운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기로 하자. 먼저 이러한 수동혁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역동화 내지는 활성화가 독재국의 민주주의국가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게 된다. 개발독재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국가와 시장의 개혁을 요구하는 '외적인' 방향으로 표출되었다고 한다면,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활성화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이러한 활성화가 확산되게 된다. 이것을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저항적 활성화'라고 표현한다면,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동성을 '주체적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해방공간에서 시민사회가 허구화됨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허구화된 법적·형식적 시민사회가 실질화되는 것, 또한 법적·형식적으로 보장된 각종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것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통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를 통해서였다. 60년대 이후 개발독재적 예외국의 억압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는 여러 영역과 차원에서 저항적으로 활성화되어갔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무소불능의 권력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힘이 강화되고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며 이를 통해 '근대적인' 시민적 주체화가 이루어져 갔던 것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의 정점을 상징하며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 및 시민적 주체화의 고양을 상징한다.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를 통하여 군부권위주의국가권력을 퇴진시키고 그것을 민주주의적 권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된 국민들과 주체화된 시민이 탄생하였다. 이런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은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는 근대적인 시민들의 탄생과정이었으며 실질적 시민사회의 탄생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87년 6월 항쟁은 단순히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 개헌 등 낮은 수준의 국민적 이슈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적 운동이었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국민들이 이미 권위주의정권에 굴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근대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측면에서 주체화된 근대적 시민으로 탄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시민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시민혁명과정에서 시민혁명에 동참하는 시민은 신분제의 속박 아래 존재하는 신민(臣民)이지

30)조희연, 2002, "정치적 자유화의 '촉복'과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 『시민과 세계』, 당대.



만--시민혁명 이후의 법제화를 통해서 근대적 시민으로 법제적으로 탄생하게 되지만--이미 시민혁명과정에서 시민은 실질적으로 이전의 신민이 아닌 근대적 시민으로 탄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은 실질적 시민사회와 실질적인 근대적 시민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시민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주체적 활성화에 따라, 3가지 투쟁전선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첫째 민주주의 전선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는 한편에서는 쟁점화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정치화'되거나 다른 한편에서 시민사회의 각종 계급계층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요구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주체적 태도가 고양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체적 활성화는 결사의 확대 및 다양한 사회운동조직의 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과거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포괄되고 있었던 부문 운동들이 새로운 독자적인 사회운동 조직으로 재편되는 것도 이러한 예가 될 것이다.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 본부, 인권 운동 사랑방 등과 같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부터의 분화의 형태로 다양한 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나아가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심화와 활성화를 위한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운동단체에서부터 환경, 여성, 인권, 지역,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적 결사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가지 독재 시기와 다른 점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라서, '목표' 상으로는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 왜곡된 국가와 시장의 개혁으로, 투쟁형태 상으로는 확장된 법적·제도적 절차와 공간을 이용하는 '제도화된' 동력'으로 표출된다고 하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의 목표가 되었던 독재국가가 퇴진하면서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의 목표와 행위 형태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목표는--사회운동가들의 주관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이제 과거와 같은 '능동혁명'이기 보다는, 왜곡된 국가와 시장의 민주적 개혁으로 변화하게 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의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의 요구가 표출될 수 있는 제도화된 공간을 확장하기 때문에, 가두에서 전투적인 방식으로 출현하고 있던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는 제도화된 장에서 다양한 제도적 통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출된다.<sup>31)</sup>

다음으로 계급 전선에서의 주체적 활성화를 들 수 있다. 계급전선에서의 시민사회 활성화는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의 조직적·정치적 발전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에 따라서 자율적인 정치적 공간 및 사회운동 공간이 확대되면서 노동운동은 이전의 비합법적 위치를 넘어서서 반(半)합법적이거나 합법적인 운동으로

31)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는 과거 독재와 반독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존재하던 문제들이 일정하게--비록 불철저한 방식이지만--해소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체제의 정책 변화에 의하여 야기되는 새로운 모순에 대응하는 새로운 저항이 출현하게 된다. 구모순의 해소와 신모순의 출현이라는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자신을 확장시키게 된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조직적·정치적 발전을 의미한다. 노동운동은 이전보다 사회운동의 중심적 위치를 강화해 가게 된다. 민중운동들은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의 심화 확산을 위한 노력(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의 주된 추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주의의 지속과 시장자율주의적·개방주의적 발전주의 하에서의 민중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활성화된 민주 노조 운동은 생산적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직과 전문직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갔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민주적 전환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는 억압적 국가 기구를 지속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이행으로 주어지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적 기조를 유지시키게 된다. 여기서 성장하는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에도 국가 권력과 지속적으로 대치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키게 된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정치적·조직적 발전은 발전국가가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노사 관계, 노정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1997년의 노동법개정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강력한 투쟁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지향하는 노동법 개정을 저지시키고 유예시키게 된다.

다음으로 생활세계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균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체적 활성화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사회적 모순들에 대항하는 방식으로도 표출된다. 이때 생활세계의 모순들은 초기 개발독재국가 때의 조건이 아니라, 발전이 '성취'된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모순들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모순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는 기존에 쟁점화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쟁점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는 '거대 파시즘'에 대한 저항 속에서 가리워져 있던 '우리 안의 파시즘'<sup>32)</sup>적 이슈들이나, 소비와 문화의 상품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점, 왜곡된 풍요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활세계의 쟁점들이 주변적인 쟁점에서 때로는 특정국면에서 사회의 중심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전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와 다른 점은 생활세계의 쟁점들이 미쟁점화와 주변화되던 상태에서 쟁점화와 중심화의 가능성이 확대되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시민적·정치적 인권이나 시민권이나 정치적 권리의 확대에 힘입어, 생활세계 쟁점들이 부각되는 기회가 확대되게 된다.

이처럼 생활세계의 사회적 적대를 중심으로 표출되는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시민적 행동주의'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시민운동이라고 표현되는 새로운 운동들은 이전에 쟁점화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쟁점화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국가와 시장의 개혁을 위한 민주주의 투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동시

32) 임지현 외, 2001, {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에 생활세계의 새로운 모습들에 대응하는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정치지체'와 '대의의 대행'**

그럼 민주주의 이행과정 속에서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운동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87년 이후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에서 가장 지체되는 영역은 바로 제도정치영역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87년 이후 정치적 자유화는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에 대한 예외국가적 통제를 약화시켰고 이는 다양한 시민적·계급적 역동성이 발휘되는 공간을 부여하게 되었다. 87년 이후 시민사회의 주체적 활성화가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인해 (변화가 지체되는) 제도정치와 (활성화되는) 시민사회 간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를 필자는 '정치지체'라고 표현한다. 87년 6월 항쟁의 의미는 권위주의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오던 제도정치--이것은 시민사회를 대표하기 보다는 군부권위주의국가에 종속됨으로써 시민사회의 표출을 억제하고 군부권위주의국가의 의지를 시민사회에 강제하는 매개역할을 하게 된다--에 의한 '정치독점'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적 제도정치가 새롭게 정당성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민중정치와 시민정치를 반영하는 제도정치의 재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 정치지체는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의 과정에서 활성화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반영하는 형태로 제도정치가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착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정치에 대한 광범한 국민적 불신과 그에 기초하는 다양한 저항 및 개혁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의 특수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필자는 '대의의 대행'<sup>33)</sup>이라고 표현한다. 제도정치의 '위임'받은 대의기관들--국회나 정당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오히려 시민단체와 같은 시민사회기구들이 대리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운동, 특별히 종합적 시민운동<sup>34)</sup>의 급부상은 정치의 불구화 혹은 지체성의 이면이라고 생각된다. 즉 제도정치의 대의성(代議性)의 왜곡성이 대의기능을 '대행(代行)'하는 '종합적 시민운동'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처럼 의회민주주의가 지 발전되어 있고 개발독재국가에 의해 왜곡된 조건 하에서는 제도정치의 대의기능이 왜곡(歪曲)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운동조직에 의한 '대의의 대행(代行)'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준(準)정부적 역할이나 준정당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기능의 비합리성, 비대의성(非代議性)도 작용한다. 관료적 저항이건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의해서건 혹은 자체의 이념적 한계성에 의해서건 정부의 기능이 합리화되어 있지 않아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존재하

33) 조희연, 2000, "민주주의이행과 제도정치, 민중정치, 시민정치", 『경제와 사회』 여름호.

34) '권력감시형' 시민운동으로서 대표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9년 7월 8일, 참여연대는 94년 9월 10일 창립되었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종합적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시민운동단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압축형 고도성장'을 하여온 것은 바로 정치지체 혹은 정당지체의 부산물인 셈이다.

게 된다. 87년 이후의 이행국면은, 과거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고착화되고 왜곡된 '구 정치사회'(정부 및 정당 등)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저항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변화해온 '새로운 시민사회' 간에 괴리가 컸던 시기이고, 이러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때문에 정치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과 개혁요구가 분출하게 된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것은 정치사회가 권위주의의 유산 때문에 정체되어 있고 그 결과 시민사회운동이 민주개혁의 의제들을 설정하고 정책화하여 정치사회를 압박하는 형국으로 전개되게 된다. 이처럼 정부와 제도정당의 대의성의 불구화가 시민사회운동조직에 의한 대의의 대행(代行)현상이 종합적 시민운동체 혹은 '권력감시형' 시민운동체의 역할을 극대화하게 된다<sup>35)</sup>. 80년대 말 이후 시민운동조직의 다양한 발전 및 그들이 실제 동원력에 비해 커다란 발언권, 즉 '과잉대표성'은 바로 제도정치와 대의의 '지체'에서 비롯되는 '대의의 대행'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 자체로 보면, 자신들의 실제적 동원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넘는 대표성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과잉대표성'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정치지체현상에서 유래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현상, 즉 정치지체 상황은 두가지 결과를 낳게 된다. 첫째는 제도정치의 지속적인 불안정과 그로 인한 제도정치의 '변형주의'적 재편이며, 둘째는 제도정치의 후진성에 도전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개혁운동이다.

첫째 정치지체에서 말미암는 정치적 불안정은 그러한 불안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정당의 '변형주의'(transformism)적 재편을 촉발하게 된다. 87년 이후의 일련의 제도정치 변화과정은 한편에서는 이러한 제도정치 자체의 변신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변형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국면에서 지배적 정당이 저항진영의 개인이나 집단의 일부를 포섭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주지하다시피 군부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적 경쟁구도는 독재 대 반독재, 혹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였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가 새로운 정치적 경쟁구도로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 집권당은 집권당 대로 부단한 자기변신을 감행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변신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변신은 국민적 지지를 '재'획득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정강정책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인물의 총원 등이 그 예들이다. 후자의 예로서, 개발독재 시절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재야 반독재저항운동의 상징적 인물들을 '수혈'하는 현상이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 제도정치의 변형주의적 변화과정은 때로는 '분자적 변형주의', 때로는 '전면적 변형주의'의 형태를 취하면서 진행되기도 한다.

35) 조희연, 2001,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망에 대한 연구", 유필무·김정훈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이념형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 이행을 통해 출현하게 되는 정당질서는 보수-자유-진보의 경쟁구도이다. 각각 이념적·정책적 지향을 달리하는 보수주의정당, 자유주의정당, 진보주의정당이 공존하면서 경쟁하게 되는 구도이다. 물론 이때 보수, 자유, 진보의 성격은 시기시기에 따라 그 질적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경우 현재까지의 정당질서의 기본 구도를 개념화한다면, '강력한' 보수주의정당, '취약한' 자유주의정당, '배제된' 진보주의정당의 구도였다. 먼저 60년대 이후 개발독재시기의 우리사회의 집권당은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이였다. 이에 대항하여 성장하여온 야당은 저항적 자유주의정당이었고 그 내부에는 YS로 대표되는 '온건'자유주의정파와 DJ로 대표되는 '중도'자유주의정파가 있었다. 70-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독재정권이 더욱 경직화되어가면서 이에 따라 제도정치적 공간은 더욱 축소되었는데, 온건 및 중도자유주의정파들은 더욱더 합법적인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되어갔고 급진적인 재야운동세력과 연합하면서 '운동정치'로 나아갔다. 87년 6월 항쟁은 바로 극우반공주의적 보수정당에 의한 권위주의적 지배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반란이었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구(舊) '지배', 그 일부로서 구 정당질서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당의 변화, 넓게는 정당질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87년 이후의 정당질서의 변화는 한편에서는 보수집권당이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단독집권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보수파와의 연합 속에서 집권하기 위한 야당의 자기변신과정이었다. 전자는 과거 극우반공주의적·권위주의적 보수정당의 합리적 보수정당으로의 '변형주의'적 재편이고, 후자는 그러한 집권당의 변화에 대응하여 야당이 개혁자유주의적인 정당으로 '변형주의'적 자기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이다. 이념형적 구도를 상정하면, 전자에서 변화의 목표점은 '합리적' 보수정당이고<sup>36)</sup>, 후자에서 변화의 목표점은 '개혁적' 자유주의정당이다.

이러한 변형주의적 변화는 수동혁명에 따른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변형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지체되어 '대의의 대행'이라고 하는 과도기적 현상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점진적이고 타협적이고--지역주의에 의한 우회를 거치면서--제도정치의 본래적인 대의적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되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순수히 배제적 영역에 불과하였던 제도정치영역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혁운동에 추동되면서 확장되고 정상화되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제도정치의 변형주의적 재편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 진영의 독자적인 진보정치세력화, 사회운동적 수준의 민중정치의 정당정치적 수준의 진보정치세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시민운동단체들의 '외부로부터의' 정치개혁 압박운동, 즉 제도정치개혁을 전면화한 '사회운동적 수준의 시민정치'의 강화이다.

36)2002년 대선 패배 후 이회창 후보가 은퇴하면서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정당'으로의 부단한 자기개혁을 요구했던 것은 이런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87년 이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들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표 4> 87년 이후 진보정치세력화의 시도들

시기	민중진영의 진보정치세력화 전술	결과
87년 대선	독자후보	후보사퇴
88년 총선	민중의 당	당선자 없음
92년 총선	민중당	50명의 후보 출마. 당선자 없음. 유효득표율 1.5%
92년 대선	민중후보	20여만표 득표. 1.0%
97년 대선	국민후보(국민승리21)	306,000표(1.6%득표)
2002년 지자체 선거(비례대표)	민주노동당	1,340,376표(8.1%)
	사회당	261,960표(1.6%)
	녹색평화당	220,505표(1.3%)
2002년 대선	민주노동당(권영길 후보)	957,148표(3.9%)
	사회당(김영규 후보)	22,063(01.%)

그러나 이러한 '대의의 대행' 현상 속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시민사회적 지향이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sup>37)</sup> 즉 87년 이후 이행국면에서 나타난 제도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지향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는 제도정당의 개혁적 재편을 향한 지향이다(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구(舊)사회운동적 성격을 띤다). 둘째는 배제된 진보정당 구도를 극복하면서 기성제도정치의 이념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향이다. 셋째는 제도정치의 정치독점을 넘어서서 제도정치 자체의 한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신사회운동적인 지향이다. 낙천낙선운동 같이 성공적인 정치개혁운동 내에는 사실 다양한 열망들이 근저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점에서 낙천낙선운동은 지체된 제도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란의 정점에 있으면서 이러한 다양한 지향들이 분화하는 전기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대의의 대행'을 주도하였던 시민운동은 이행국면에서 높은 국민적 신뢰를 향유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정치적 중립성 혹은 비당파적 성격(non-partisanship)을 반대급부로 하고 있었다. 일종의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의 교환(trade-off)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진보주의정치세력은 기성세력을 위협하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제



도정치로부터 배제되어왔다. 진보주의 정치세력들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분립하여 성장할 수 있었으나, 자유주의정당에 영입되어 자유주의정당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거나(87년 이후의 수차례의 재야입당파를 상기) 심지어 보수주의정당에 영입되어 보수주의정당의 '합리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2002년 총선에서 386세대 중 일부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 상기). 2002년 8월 8일 금천구 선거에서는 흥미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우재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이목희 후보가, 민주노동당에서는 최규엽 후보가, 사회당에서는 김향미 후보가 나섰다. 모든 후보가 재야진보진영의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이우재 후보는 90년 민중당의 대표였었고 이목희 후보는 경인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며 최규엽 후보는 전민련, 전국연합 등 재야연합조직에서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인물이며 김향미 후보는 신예 사회주의 후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상황은, 현대상선의 대북지원을 둘러싼 대여공세에 정형근, 이재오, 김문수 의원이 나란히 선봉에 서서 투쟁하던 일이었다. 6.15남북정상회담을 돈을 흥정한 것이라고 하는 대정부 공세의 선봉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억압과 고문의 상징이던 정형근의원과 그에 맞선 싸운 재야 인사인 이재오, 김문수 의원이 '힘을 합쳐' 맹활약을 하였다. 민주와 진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세상이 '일사분란하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바로 민주주의이행기의 변형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100만표의 지지를 받는 제3정당으로 확고하게 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강력하지만 약화된 보수정당-취약하지만 강화된 자유주의정당-제도정당화한 진보정당'의 구도로 이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어떤 점에서 민주당의 '패배'일 수도 있다—노무현의 승리이기 때문에, 향후 정당개혁 및 재편의 향방에 따라 이러한 구도는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제도정치의 정상화는,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극단적인 괴리상황 속에서, 한편에서는 구보수주의정치세력의 경향적 약화와 자유주의정치세력의 경향적 강화를 통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주의 사회세력을 대표하는 진보주의정치세력의 제도정치권 진입을 통하여, 괴리가 일정하게 극복되어 간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제도정치의 대의력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상황 하에서는 보수주의정당의 장기집권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수주의는 극우반공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고, 제도정치 영역이 극단적으로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현상이 극단적으로 존재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반독재 사회세력이 연합하여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게 된다<sup>37)</sup>. 그러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즉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이 갖는 중요한 변화는 제도정치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적 상부구조의 일부로서 제도정치가 갖는 시민사회의 포섭(co-optation)적 측면을 회복하는 방향에서의 개혁—이것은 자체의 동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37) 조희연 편,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참조.

—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지배블럭 내에는 이제 극우적 분파 만이 아니라 중도자유주의적인 분파까지 존재하게 되며, 보수주의적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집권이 가능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김대중정부의 성립과 노무현 정부의 성립으로 현상화되는 '중도 자유주의적인 정파의 지배분파로의 정립' 및 '중도 자유주의적인 정부의 강화'는 지배의 합리화이자 정상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지배 혹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합리화' 과정 속에 있는) 자본제적 민주주의 국가 혹은 부르주아적 국가 규정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운동의 부상은 과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에 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상호결합되어 있었던 (저항적) 자유주의세력과 진보주의세력이 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김영삼이나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반독재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제도정치권으로 복귀하고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과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합되어 있었던 (저항적) 자유주의 사회세력들이 진보주의적 사회세력들과 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70·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성은 자유주의적인 제도'정치'세력과 자유주의적인 '사회'세력, 진보주의적인 '사회'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독재민주화운동 속에서 진보주의와 연합함으로써 한국의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은 부분적으로—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진보적인 성격 및 사회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들은 80년대 민주화투쟁을 통하여 합법적인 제도정치영역으로 복귀하게 되고 이후 집권세력으로까지 변화하게 된다<sup>38)</sup>. 여기서 진보주의와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의 분리가 나타나게 된다. 제도정치영역에 복귀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들은 역으로 '반독재 진보주의세력들을 '수혈'함으로써 '합리화되는' 보수주의정당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한국의 '취약한' 자유주의세력이 '강력한' 보수주의세력과의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인지는 미래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나아가 시민사회 내부에서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세력 간의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시민사회 내부의 분화를 본다면, 87년 이후 민주화는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운동 공간을 확장하게 되었고, 시민사회 내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세력은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자유주의·진보주의 연합운동(민중운동)으로부터 분립하여 독자화하게 된다. 80년대 후

38) 87년 이후 노태우정부라는 과도기를 거쳐 문민정부 및 국민정부라고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세력의 집권기로 이행하게 된다.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는 반독재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비록 연합하기는 하지만—집권세력의 중심분파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는 차이를 갖는다. 전자는 반독재(은근)자유주의세력이 과거의 보수주의세력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집권하였으나 후자는 (중도)자유주의세력이 중심이 되어 과거의 '주변적' 자유주의세력과 연합하는 방식으로 집권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합리화된' 보수주의의 재집권의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며, 후자는 독자적인 자유주의적 집권을 의미한다.



반 경실련 등으로 상징되는 시민운동의 부상은 정치사회적 실천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적 지향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이념적 분화와 다양화<sup>39)</sup>가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거시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민운동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세력들은 정치적 자유화에 있어서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로 인한 점진적 개혁성, 불철저한 개혁성에 대립하여, 철저한 개혁을 촉구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게 된다.

과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 보수주의적 관변단체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진보주의적 민중운동이 존재하였다. 양자의 중간에 이른바 시민운동이 존재하였으나, 그것은 '탈(脫)정치화된 시민운동'으로 존재하였다<sup>40)</sup>. 그러나 이러한 중간지대의 사회운동이 반독재 민주화운동 및 민중운동의 투쟁에 힘입어 자유 공간이 확장되면서 점차 자율성과 비판성을 획득하게 되고 87년 이후에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운동, 즉 시민운동으로 독자화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자유주의적 제도정치세력에 의해 추진되는, 87년 이후의 민주주의개혁은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국민적 기반은 대단히 넓게 만들게 된다. 한국에서의 시민운동의 성장은 시민운동의 내적인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민주화개혁의 구조적 성격에서도 찾아야 한다<sup>41)</sup>.

87년 이후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분화되는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은 초기에는 민중운동과의 대립적 성격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민주주의이행 자체의 성격을 보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중운동과의 대립적 성격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일종의 '대체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이행이 진행되면서 시민운동 자체가 다원화되고 분화되면서 이러한 초기의 성격은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민운동의 경우 그 지배적 성격은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보수적 성격에서부터 온건진보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한 단체 내부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거나, 보수주의-자유주의-진보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이념의 스펙트럼을 넘어서서 생태주의나 페미니즘, 공동체주의 등 정체성 자체의 분화도 나타나게 된다.

### 3)김대중 정부·IMF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39) 조희연, 2001,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변화전망에 관한 연구" 참조.  
 40) 조희연,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2001.  
 41) 민선민간정부 시기에 있어,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시민운동)은 민선민간정부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 속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로 경도되어 왔다고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제의 관치주의적 성격, 국가주의적 성격에 대한 개혁(예컨대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은 민선민간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로 나아가게 된다. 노동운동에서 시민운동의 친(親)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정치적 자유주의 및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에 따라, 사회운동은 중층적으로 분화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1)변화의 성격--'민주정부' 하에서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노태우정부와 문민정부의 시기와 국민정부의 시기는 차이를 갖는다. 특별히 정치적 측면에서 이전의 정권이 60년대 이후의 보수적 정당의 재집권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정부는 반독재 자유주의 야당세력이--비록 보수주의의 일부 분파와 연합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집권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 일정한 도약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자유화의 진행이 국민정부를 경과하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개방성이 증대되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실현되는 제도적 통로가 대폭 확장되는 제도화의 단계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투쟁전선과 사회운동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50년만의 야당정부가 IMF경제위기와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은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야당정부 수립과 IMF 관리 체제로의 전환은 제반 정치적·사회적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IMF 체제로의 이행과 야당 정권으로의 이행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1998년의 이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양자의 동시적 출현이 갖는 함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 '개혁' 정책은 늘 정치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sup>42)</sup> 한국의 국가가 공통적으로 담지하는 발전주의 기조가 개방주의 및 시장자율형으로 전환된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것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출현 이후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야당정부의 출현은 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추진하는 발전주의적 정책의 일대 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발전주의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규제라든가 평등주의적 정책의 강화 등도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야당정부가 갖는 정치적 진보성이 경제정책 상의 질적 변화로도 반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IMF경제위기는 야당정부의 이러한 '잠재적' 진보성을 정치적 차원에만 '유폐'시키고 오히려 정치적 정당성을 반대급부로 하여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하여,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경제적 자유화를 보다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민 정부는 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및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개방을 시도하였으며, 자본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 조치가 외환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의 대외 종속<sup>43)</sup>과 탈국민화가 확산되었다. 국민 정부는 자신이 갖는 정치적 정당성을 무기로 하여 또한 IMF 관리 체제하에서 IMF의 요구를 명분으로 하여, 이전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주의적 발전주의' 정책 및 시장주의적 발전 정책을 추

42) Haggard, Stephan and Robert R. Kaufman,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43) 2002년 말 현재 제일은행의 외국자본의 지분이 51%, 주택은행의 경우 65%, 국민은행의 경우 56%, 신한은행의 경우 49.5%를 차지하고 있다.(유용주, 『은행구조조정 3년간의 평가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1 참조).



진하게 된다. 이는 민영화와 개방화, 외자 유치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각에서 '외자 만능론', '민영화 만능론'이 국민 정부를 사로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며, 이른바 '종속적 신자유주의'<sup>44)</sup>로 경도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동일한 외환 위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고 간주되는 김대중 정부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정부에 비해 훨씬 더 개방주의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IMF가 권고한 정책의 '충실한' 시행자가 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에겐 강력한 반공주의로 인해 친미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인 한국의 의식적 조건, IMF 구제 금융의 조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재협상론'이 '반국가적'인 발언으로 매도되는 협소한 의식적 지형, 사회운동 자체가 발전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 IMF 정책에 더욱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하는 탈脫민족주의적 야당이 존재하는 정치적 지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sup>45)</sup>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자신의 '전략적' 선택으로서 이러한 개방주의적 발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50년만의 야당정부 즉 '민주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이 강도높게--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하에--추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7년 이후의 변화는 지배블럭의 구성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배와 피지배, 지배블럭과 저항블럭의 경계도 달라지게 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반민주적 억압을 행하고 제도정치 내에서 반독재 자유주의정치세력마저도 배제하는 조건 하에서, 지배블럭과 저항블럭의 경계는 극우보수주의세력, 군부세력을 구성으로 하는 협애화된 지배블럭이 한편에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반독재 자유주의정치세력과 진보주의적 사회운동세력 등으로 구성되는 저항블럭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 지배블럭의 구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저항블럭에 속하였던 반독재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지배블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정부 그 자체가 저항블럭의 성과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야당정부는 반독재 자유주의야당정치세력이 저항블럭에서 지배블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과정 이 지배의 혁신으로 귀결되는 '수동혁명'이 되는 것을 바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과거의 지배블럭은 극우보수주의로 일색화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 반독재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은 보수주의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집권세력--비록 보수파와의 연합(예컨대 자

민련)에 의한 것이지만--으로 됨으로써 이제 지배블럭 내의 구성이 다원화되게 된다. 지배블럭이 단순히 정권담당엘리트 뿐만 아니라 야당정치집단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제 지배블럭 내는 극우보수주의 분파, 상대적으로 온건합리주의적 보수적 분파(예컨대 YS분파), 중도자유주의적인 분파(DJ세력)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다. 문민정부에서는 구 보수주의적 세력에 반독재 온건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형태로 지배블럭이 재구성되었다고 한다면, 국민정부에서는 반독재 중도자유주의정치세력이 독립적인 분파로서--구 보수주의세력과 경쟁 및 대립하면서--지배블럭의 독자적인 구성세력이 된다. 87년 민주주의 이행 이전에는 극우보수주의적인 분파들이 정권담당엘리트 지위를 독점하였으나, 이제 중도자유주의적인 분파가 정권담당엘리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더구나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서 평화공존형 남북관계가 추구하고 있다고 할 때, 지배블럭 내는 대결적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보수주의적 분파와 평화공존형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분파가 공존하는 셈이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와 다원적 사회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정확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sup>46)</sup>. 한국의 경우 아래로부터 민중적 투쟁이 지배에 대해서 강제한 '수동혁명'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배블럭의 변화, 즉 지배담론 담지주체의 변화는 근대화담론의 세계화담론으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근대화담론이 극우보수주의적인 군부권위주의세력에 의해 담지되었다고 하면, 이제 세계화담론의 담지주체가--극우보수주의와 연합한--온건자유주의적인 반독재정치세력(문민정부)과 중도자유주의적인 반독재정치세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이것이 민주화와 세계화의 결합의 갖는 구조적 의미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민주화는 이제 민주세력으로 하여금 새로운 지배블럭의 중심 분파가 되도록 하고 바로 그 민주세력이 '신근대화'론에 다름아닌 세계화를 추진하는 주체로 되는 것이다.

세계화 담론의 핵심적인 구성내용이 되는 개방화와 민영화, 포괄하여 개방주의적·시장중심적 발전주의는 앞서 지적한 대로 이미 전두환 정권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독재정권의 '정치적' 한계에 의해 굴절되면서 실시될 수밖에 없었으며, 포괄적인 지배담론으로 정식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배담론으로의 재정식화는 지배블럭 내에서 헤게모니 분파의 전환이 나타나는 87년 이후, 특별히 문민정부에서였다. 어떤 점에서 지배담론의 세계화담론으로의 전환은 그 담지주체가 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으로 전

44)이병천, 「전환기의 한국경제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글로벌 스탠더드와 구체제의 악조합」, 이병천·조원희 편,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구조조정 실험의 평가와 전망」, 당대, 2001.

45) 김대중의 개혁과 마하티르의 개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말레이시아에 반서구주의적인 이슬람 야당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문화 정치적 요인, 외환 보유고가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 위기를 맞았다는 상황적 요인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재협상론 자체가 '반국가적인' 발언으로 치부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지형 자체가 특수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6)이러한 분화가 사실 한국의 민주화가 결국 지배의 철폐가 아니라 '지배의 혁신'이자 '저강도민주주의'로 귀결되는 것이다(조희연, 1998,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2장).

47)지배담론이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에 의해 담지되는 것은 시민사회 내에서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의 독립적 존재와 부상에도 기반하게 된다. 시민사회의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은 지배담론으로서의 세계화 정책이 구체제의 개혁이라는 점에서의 긍정성(예컨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세계화담론의 시민사회적 기반을 부분적으로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노동운동 내부의 논쟁 참조).



환되면서 비로서 완성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문민정부에 의해 정식화된 세계화 담론은 IMF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정부에서도 계승되게 된다. 이것은 세계화담론의 담지주체가 구 보수주의세력에서 보수주의세력과 유착한 반독재 자유주의세력(예컨대 김영삼계), 반독재 자유주의세력(김대중 계)으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계화 담론이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할 때 그것이 과거의 보수주의세력이 주도하는 방식과는 차별성을 가지면서 전개된다. 이는 과거의 보수주의적 세력에 비해서 대항담론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선택적 포섭하는 방향에서 지배담론을 보완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항담론이 요구하는 구체제의 민주적 개혁의 요구들을 일정하게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자본과 시장이 요구하는 세계화 정책들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 역사바로세우기, 하나회 숙청 등 많은 민주개혁의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세계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지배담론으로 재정식화하였다. 국민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이라는 모토 하에서 시장경제의 민주적 개혁의 과제를 '강도높게' 시행하면서 시장경제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개혁--과거의 독재정권 및 문민정부가 수행하지 못하였던 개혁--을 '강도높게' 수행하게 된다(48).

이처럼 구 권위주의체제의 민주개혁이라는 과제를 반대급부로 하여 새로운 지배담론은 반독재 자유주의정치세력에 조응하는 것으로 정착되어가게 된다. 이는 우연을 매개로 한 것이지만 지배담론의 변화와 지배담론 담지주체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화와 세계화의 결합의 성격이다.

(2)투쟁전선과 사회운동의 변화—정치적 자유화에 의한 '제도화' 진전과 그것의 도전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앞서 서술한 민주주의 전선, 계급 전선, 생활세계 전선을 둘러싼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총괄적으로 볼 때 50년만의 야당 정권의 출현은 이러한 세 전선에서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1987년 이전에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의 억압에 대항하여 시민사회가 저항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나아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는 구집권당이 변형되면서 여전히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속에서 억압과 선택적 포섭이 병행되는 '민주주의적' 발전국가가 지속되고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가 '주체적 활성화'의 경향을 보였다. 이제 국민정부·IMF 경제 위기 이후에는 선택적 포섭(제도화)과 억압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발전국가가 작동하고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에서는 한편에서 수동화가 다른 한편에서 새로운 저항적·주체적 활성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야당 정권의 출현은 과거의 투쟁 전선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은 시민적·정치적 활동 공간의 확장이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개방성의 증대이다. 즉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던 반독재과 야당 정권의 출현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48)역설적으로 과거의 근대화 담론에 이은 세계화 담론을 주도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민주적 개혁을 동반한 반독재 자유주의세력이 주도하는 정부에 의해서였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제를 실현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비제도적 자원의 양을 급속하게 증대하게 했다. 또한 시민사회의 의제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공간 자체도 확대하게 된다. 야당 정권의 출현 자체가 시민사회의 저항적·주체적 활성화를 근거로 하여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의제 자체가 상당 부분 야당의 정강 정책으로 의제화되거나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개방성이 훨씬 증대되게 된다. 이처럼 활동 공간 자체의 확대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한 제도적·비제도적 개방성의 증대로 인하여, 발전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여러 전선과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회운동의 관계는 3가지 차원 모두에서 중층적으로 전개되게 된다. 먼저 야당 정권은 민주주의 전선, 계급 전선, 생활세계 전선에서 이전 시기에 제시되었던 과제들을 정책적 의제로 전환하여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며, 급진적 저항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억압하는 배합 방식을 구사하게 된다.

사회운동 조직의 차원에서 볼 때, 제도화는 사회의 여타 조직들—정부 조직도 포함된다—과의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이전의 비합법적, 반합법적 지위를 강요당해 왔던 전투적인 사회운동 조직들이 반합법적,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여성부의 신설이나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같은 국가 기구의 개편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수용되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화는 또한 정부나 각종 공공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적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49).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은 이런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수동화되고(50) 동시에 국민 정부하에서의 활동 공간의 확장을 계기로 새로운 저항적·주체적 활성화를 띠게 된다. 특히 야당 정권의 출현으로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가 일정하게 해소되어 시민사회의 불만이 혁명적 방향보다는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 온건한 형태로 표출되게 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수동화가 촉진된다. 과거의 정부와 달리 야당 정부하에서의 국가-시민사회 관계는 이처럼 이중적 측면을 지닌 채로 전개되게 된다.

먼저 민주주의 전선의 경우, 이전 시기의 요구들이 제도화되는 정도가 대단히 많게 된다. 집권 이전 야당의 정책 의제와 시민사회의 의제가 중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의 집권 이

49) Mayer와 Tarrow는 제도화란 본질적으로 자기 유지적인 반복 가능한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내용 상으로 일상화(routinization), 포섭과 주변화(inclusion and marginalization), 포섭(co-optation)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Meyer, David S. and Sidney Tarrow,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in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Sidney 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1998).

50)예컨대 반부패의 경우 친정부적인 반부패 운동 기구들이 존재한다. 국민 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수동화를 가속화하고 친정부적인 시민사회 동원을 위하여 '제2건국위원회'(이의 성격과 평가에 대해서는 조희연, 「제2의 건국'운동과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운동」, 학술단체협의회 외 주최 정치대토론회, 1998년 10월 21일 참조)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였다.



후 시민사회의 의제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정치개혁이나 재벌개혁과 같이 왜곡된 국가와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개혁들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된다.<sup>51)</sup> 50년 만의 야당 정권의 수립, 이전의 집권당의 퇴진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 대한 개혁의 강도와 수준을 높힐 수 있게 된다. 문민 정부가 재벌 개혁을 몇 번이나 의제화하려고 노력했으나, 시장과 자본 진영의 압박에 의해 포기해야 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국민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 차원에서 재벌 개혁 등 시장 개혁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문민정부 초기에 시도되었던 재벌 개혁이 무산된 것에 반하여, 국민 정부의 재벌개혁은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하여—비록 타협적이기는 하지만—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부패 방지법 제정을 통하여 부패 추방에 대한 과거 시민사회의 압력이 일정하게 제도화되게 된다. 과거 청산과 관련하여,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가 설립되고 민주화 운동에 참가했던 이들의 명예 회복 및 보상이 진전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제도화의 예들이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국민 정부 하에서 과거의 의제가 정부에 의해 수용되면서 시민사회가 수동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정부 출현 이후 확장된 정치적·시민적 활동 공간에 힘입어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2년 4월 정치 개혁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이 있으며, 2002년 후반부터 실시된 의약 분업, 안티조선운동 등의 언론 개혁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업들로서 이전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으나, 야당 정부의 성립에 힘입어 시민사회의 개혁 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야당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정부 자체가 몰고 오는 확장된 자유 공간으로 인하여 다양한 민주주의적 이슈들이 분출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전 정부에 비해 시민사회 의제가 많이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민주주의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계급 전선의 경우를 보자. 계급 전선에서도 선택적 포섭을 위한 제도화의 시도가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는 급진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억압이 병행되었다. 야당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이 대표적인 모델이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전의 노정의 전투적 관계를 뛰어넘어 노정 간의 새로운 협의적 모델을 실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 내의 노동의 요구를 제도적인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 합법화, 실업 극복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 등도 이러한 테이블에서 다루어졌다. 이런 사항들은 야당 정부의 정치적 진보성의 발현이기도 하였지만, IMF가 권면하는 구조 조정의 사회적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도 담겨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계급 전선의 경우, 이러한 제도주의적 포섭을 뛰어넘어, 새롭게 개방주의적·시장

51) 김대중 정부의 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굴절되고 한계지어진다. 그러한 한계요인으로는 '포위된 개혁'에서 유래하는 한계,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압력에 의한 한계, 개혁의 관료화로 인한 주체적 한계 등을 들 수 있다(조희연, 「김대중 정부 개혁의 '복합성'과 시민사회운동」, 『동향과 전망』, 박영출판사, 2000년 가을호 참조).

주의적 발전주의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계급적 균열이 확대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의 이러한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 진영과 정부 간의 갈등 관계가 확대되게 된다. 이른바 '20:80사회'가 도래하고 구조 조정 및 경제 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노동 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하게 됨으로써, 소득 불평등, 고용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게 되고 민중들의 고통은 강화되게 되었다.<sup>52)</sup> 야당 정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협의적 관계가 조성되었으나, 구조 조정이 진전되면서 노동 진영의 저항적 활성화는 오히려 증대되게 된다. 반노동적 구조 조정, 노동 배제적 구조 조정 및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종속적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수렴되고 종합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sup>53)</sup>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 국민 정부는 한편으로는 야당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과 위기 극복의 경제적 정당성 논리를 통하여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2001년 부평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폭력 사태는 바로 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각종 비정규직화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도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강화는 조합주의적 타협 장치로서의 노사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야당 정부 이후의 계급 전선의 상황은 위로부터의 선택적 포섭 및 제도화로 인한 노동의 수동화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에 대항하는 노동의 새로운 저항적 활성화가 우위를 점하는 식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셋째, 생활세계 전선을 보기로 하자. 생활세계 전선에서는 야당 정부의 출현으로 확장된 시민적·정치적 공간의 확장을 향유하면서 이전에 주변화되었거나 억압되었던 많은 이슈들이 새롭게 쟁점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았다고 할 수 있다. '들려지지 않았던 목소리(the voice of the voiceless)'가 제도적 공간에서 반영되는 가능성도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 생활의 이슈들, 인권, 동성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의 문제들이 새롭게 쟁점화되고 중심화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화와 쟁점화는 부분적으로 제도화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시민적·정치적 인권의 침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은 인권 운동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상당한 진보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권력에

52) 통계청이 발표한 노동 소득 분배율의 추이를 보면 1996년에 64.2%, 1997년에 62.8%, 1998년에 61.6%, 1999년에 59.7%, 2000년에 59.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에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하위 20%의 소득의 4.74배였으나, 2000년에는 6.77배로 늘어났다. (『동아일보』 2002년 4월 26일자)

53) Hart-Landsberg와 Burkett은 위기 이후의 구조 조정 post-crisis restructuring의 성격을 자유화와 탈민족화 denationalization, 집중과 집적의 확대, 이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막대한 사회적 희생으로 보고 있다(Hart-Landsberg, Martin and Paul Burkett, "Economic Crisis and Restructuring in South Korea: Beyond the Free Market-Statist Debate", Critical Asian Studies 33: 3, 2001)



대한 감시와 대중생활 및 문화행정 상의 여러 이슈들을 쟁점화하고 있는 문화개혁시민연대의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개방주의·시장주의적 발전주의가 문화적 영역에 표출된 예로 스크린 쿼터 제도를 들 수 있다. 스크린 쿼터 폐지에 반대하는 문화 예술인, 영화인들의 투쟁은 문화적 영역이 시민적 역동성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 공간에서 시민적 역동성이 기성 체제establishment에 대한 저항적 행동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 개혁 운동, 특별히 안티조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반공주의적·보수주의적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기제로서 스스로가 언론 권력화하였던<sup>54)</sup> 보수 언론에 대한 투쟁은 야당 정부하에서 주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사회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안티조선운동은 반공주의적 규율이 작동하고 있는 한국 사회, 즉 반공규율 사회로서의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보수성이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전선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모두 개입하고 있는 전선이라고 할 수 있고, 계급 전선은 주로 노동운동에 의해 주도되는 전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활세계 전선은 주로 시민운동에 의해 주도되는 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 전선에서 노동운동이 야당 정부와 야당 정부의 발전주의 정책에 대해 강한 저항성과 비판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 전선과 생활세계 전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시민운동이 주도함으로써 계급 전선의 전투적 비판성과는 구별되는 온건한 비판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야당 정부의 초기에 조합주의적 정책이나, 시민사회의 이슈를 제도화하려는 선택적인 포섭 정책이 지배적인 국면에서, 시민운동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정부에 협력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후반기에 오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먼저 민주주의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부패 문제에 대해서 야당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음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시민운동의 비판성이 회복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정경 유착을 연상시키는 벤처 비리,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권력층의 비리와 권력 남용 등이 크게 쟁점화됨으로써, 민주주의 전선에서 시민운동의 대정부적 비판이 고조되게 되었다. 둘째로는 야당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과도한 민영화 정책과 개방화 정책이 유발한 국민 경제의 새로운 종속에 대한 우려, 신자유주의적인 구조 조정의 결과로서의 불평등의 확산, 그로 인한 계급적·사회적 균열의 확대와 사회 해체 현상이 확산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균열의 등장은 시민운동들이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및 정부의 개방주의적·시장주의적 발전주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이러한 개방주의적·시장주의적 발전주의 정책이 '공공성'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등 민중운동의 전투성이 수렴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sup>55)</sup> 특

54) 조희연, '국가-시장-시민사회'와 언론-언론개혁운동, 언론개혁시민연대 편, 『21세기 시민언론운동』, 2001 참조.

55) 시민운동은 초기에는 낙하산 인사 및 관치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비효율적이었던 공기업에 대한 개혁

별히 이 양자의 운동은 공공성의 유지와 확대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계급적·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수렴--근본적인 관점 차이도 엄존하지마는--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 (3)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시민운동에 집중되어 있던 복합적 역할의 분화

수동혁명에 따른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변형은 제도정치와 사회에 상응하는 것이다. 예외국가의 정상화에서 핵심적인 현상은 제도정치와 정상화이다. 이처럼 예외국가의 정상화의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어떤 도전을 갖게 되는 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의 정치지체와 대의의 대행현상은 정점에 2000년 4월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낙천낙선운동은 대의역할을 위임받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도정당의 공천기능 및 공천된 후보들의 선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대의의 대행현상의 하나의 전제는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혹은 비당파성(non-partisanship)이었다.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위임받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제도정당을 상회하는 국민적 신망과 지지를 받는 대신에 비당파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요구하였다. 일종의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의 교환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정부 하에서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더욱 확장된 정치적 자유화의 영향이기도 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낙천낙선운동은 한편에서는 대의의 대행 현상의 정점에 서는 사건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의 틀에 머물러서는 더 이상 고도의 운동을 전개할 수 없는 분화의 계기이기도 하였다. 2002년 대선은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이 주도하여 왔던 '대의의 대행' 현상이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틀을 넘어서서 분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2002년 대선은 앞에서 서술한 제도정당의 개혁적 재편을 향한 지향이 정치적 중립성의 틀 내에서 자신의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시민운동 진영과 노사모와 같은 당선운동 및 중도자유주의정당의 참여적 개혁운동으로 분화되어 표출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2002년 대선에서는 기성제도정치의 이념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향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100만표에 이르는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2002년 대선의 동학이 의미하는 바는 자못 크다. 먼저 시민사회의 역동성이--2000년 대선에서와 같은 낙천낙선운동을 넘어--노사모나 20·30대 행동주의와 같이 정치

을 지지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개혁의 한 방안으로서의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노동운동 진영은 민영화를 신자유주의화의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표 5> 87년 이후 3가지 투쟁전선의 변화

	개발독재 하의 상황	민주주의 이행 이후의 상황	야당정부/IMF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민주주의 전선	구심력적 집중. 반독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투쟁의 수렴	민주주의적 공간의 확대/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시민적·정치적 활동공간의 확대.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는 제도화된 역동성으로 표출됨. 동시에 기존에 억압되었던 투쟁들이 제도적공간을 활용하면서 출현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줌.	한편에서는 제도화로 인한 선택적 포섭과 그로 인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전선에서의 수동화. 그러나 상대적으로 확장되는 자율적인 운동공간을 향유하면서 왜곡된 국가와 시장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선택적 활성화가 나타나게 됨.
계급 전선	개발의 모순에 대한 저항을 전면적 억압. 억압에 대응하는 민중운동의 확산.	시장육성적 국가개입주의·보호주의적 발전주의로부터 시장주의·개방주의적 발전주의로의 전환. 민주주의이행기에 일정한(절대적) 몫의 증가. 그러나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불평등의 확대. 개발에 대응하는 저항에서, 개발 이후의 시장주의적·개방주의적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변화.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조직적·정치적 발전과 투쟁 전개	계급전선의 경우에는 야당정부에 의한 조합주의적 포섭 시도(예 노사정위)를 보이는데 대응하여 초기에는 민중전선의 전투성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개방주의·시장주의적 발전주의정책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불평등이 심화, 고용불안정의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전투적 저항의 선택적 출현. 시장자율화개방화의 확대에 인하여 경제적 자유화의 '재앙'이 심화됨.
생활 세계 전선	개발에 따른 생활세계의 변화.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시민적 운동들의 전개. 그러나 반독재라는 중심적 과제의 일부로 발전 받지 못하게 됨. 주변적 운동으로 발전해 옴(환경운동 등)	생활세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적 운동들의 확산. 초기에는 자유주의적 성격의 운동들이 지배적. 그러나 분화되어감. 중앙권력에 대응하는 운동에서, 지역 수준·풀뿌리 수준의 운동으로 확산. 분권·자치·자율을 중시하는 운동으로 발전.	생활세계 전선에서는, 야당정부의 출현으로 확장된 시민적·정치적 공간의 확장을 향유하면서 이전에 주변화되었거나 억압되었던 많은 이슈들이 새롭게 쟁점화되어가는 과정을 밟음. 새로운 정치공간에서 시민적 역동성이 기성체제(establishment)에 대한 다양한 저항적 행위의 표출.

개혁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근거리의 개입전략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사모와 같은 운동형태들은 과거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의 틀을 벗어나는 개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틀 내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선거비용의 투명화, 불법 선거자금의 감시, 정책선거로의 가도록 하는 압력 등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노사모를 비롯한 젊은 세대의 온라인-오프라인 참여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무현 후보의 당선운동을 통해서 정치개혁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보여진다.

사실 2002년 대선에서도 시민사회단체는 대선유권자연대를 통해서 선거비용감시, 정책선거 제고, 유권 참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정책선거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역할도 수행하였다<sup>56)</sup>.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틀 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대선과 같이 2명의 후보 간의 선택이 문제로 되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인 개입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노사모를 비롯한 온라인-오프라인 운동은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전제로 하여 일보 전진한 정치사회개혁 개입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단체가 규칙을 감시하고, 압박하고 때로는 부패한 인사를 배제해 내기는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받은 사이에 그것을 뛰어넘는 적극적 행동주의가 노사모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사모, 20·30대 네티즌들의 행동주의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그 결과로서의 정치지체의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적 역동성이 표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하나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57)</sup>.

앞서 지적한 대로, 87년 이후 이행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때문에 정치사회의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게 된다. 공명선거 감시운동에서부터 의정감시운동, 국정감사 감시운동, 낙천낙선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낙천낙선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의 틀 내에서 시민사회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개입형태라고 할 수 있었다.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광범한 운동을 펼치고 개혁압력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되는 정치'에 대한 불만과 개혁요구가 강력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노사모와 인터넷을 통한 세대혁명만은 바로 기존의 시민사회 역동성이 개혁적 '중도자유주의' 후보의 지지(支持)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

56) 이번 대선이 일정한 정책선거적 양상을 띠 수 있었던 데에는 대선유권자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캠페인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에 제3자로서 개입함으로써 이전의 지역주의적 경쟁양상이 제약되고 노동당이 부유세 등 정책적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상호 경쟁적으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정하게 정책선거적 양상이 존재하였다고 생각된다.

57) 이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잣대로만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중립성은 감시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고 시민사회단체가 아래로부터 만들어내 정치개혁의 열망이 노사모와 같은 정치개혁적 행동주의로 표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여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중립성의 자기규칙이 일정한 영역 이상의 행동양식을 취할 수 없는 한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었다(조희연, 2003, "제2기 민주화" 단계의 구조적 의미와 개혁담론의 방향", 2002 대선 교수네트워킹, 민교협, 학단협 외, 『2002 대선 평가토론회』, 2002. 12.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성제도정치의 이념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향이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100만표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100만표의 지지는 진보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 뿐만 아니라 기성 제도정치의 이념적 불구성을 넘어서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동시에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약진은 그만큼 진보정치세력화를 제약하고 있었던 극우반공적 보수주의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반공냉전적 보수주의의 영향력이 그만큼 약화되었고 이것이 과거의 반공냉전적 보수주의의 영향력으로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20·30대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권위주의시대에는 보수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하였다. 과거 보수주의세력의 최대의 기반은 반공주의—핵심적으로는 남북대결주의와 반북주의라고 생각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균열되어왔다고 생각된다.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던 구 보수주의세력의 헤게모니는 대결적 남북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보수주의세력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면, '대결'적 상황만 조성하면 되었다(예컨대 87년의 KAL기 폭파사건이나 '북풍' 조작 등). 이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세력은 감히 이에 대항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반독재투쟁의 과정에서 대항헤게모니는 강화되면서 보수주의세력의 헤게모니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왔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공존주의의 실제화는 남북대결주의와 반북주의에 기초한 보수주의세력의 헤게모니의 약화와 균열을 가속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보수주의세력이 남북대결주의에 기반을 두었던 만큼, 그 대결의 기반을 변화시키면 헤게모니는 약화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의 남북대결주의와 반북주의가 시민사회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평화공존주의가 시민사회를 충분히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아직도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계기적 사건(잠수함 사건 등)이 나게 되면 보수적 언론과 보수적 정치권이 시민사회를 극우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서해교전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연평도 총각'의 등장과 같은 식으로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보수적 동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주의세력의 헤게모니가 이전과 같이 전일적으로 관철되지 못한다는 것이며, 보수적 헤게모니가 그만큼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실 2002년 대선이 일종의 '세대혁명'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반공냉전적 보수주의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먼저 벗어나는 층이 20·30대 젊은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80년대의 정치격변을 겪은 30대와 인터넷을 통해 이들과 결합한 20대 N세대 혹은 W세대가 과거의 반공냉전적 보수주의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와지면서 이번 대선에서와 같은 정치개혁적 행동주의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2002년 대선은 87년 이후의 이행국면을 통해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강력하게 존재하였던 보수주의의 구각(舊殼)이 한꺼풀 깨지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사실 북풍 사건이 투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이를 상징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대의의 대행현상에는 3가지 지향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즉 지체된 정당질서의 근대적 정당질서로의 변화를 바라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요구(아래의 1), 제도정치의 이념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진보정당의 진입을 향한 요구(이것 역시 근대적 정당질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아래의 3), 근대적 정당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고자하는 '생활'정치적인 요구(아래의 4), 제도정치 자체에 대한 '외적' 감시 요구(아래의 4)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낙천낙선운동이나 시민운동의 '대의의 대행'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이러한 요구들과 지향들을 유형화하여 본다면 다음의 표와 같다. 첫 번째의 지향은 노사모나 개혁국민정당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으며,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 시민운동 입장에서 시민운동의 준정당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던 국민적 지지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시민운동에 중첩되어 있던 역할들이 분화되어가고, 그러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제도정치 외부에서의 정치개혁 압력운동을 지속하고 동시에 근대 정당정치 자체를 넘어서고자 하는 생활정치적 지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6> 시민운동의 사회적 기반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요구 및 지향들

순서	요구의 성격	변화 및 전망
1	기성 제도정당의 개혁을 바라는 요구	노사모나 개혁국민정당 같은 형태로 표출
2	기성 제도정치영역의 이념적 개방화를 보정당의 출현을 바라는 요구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100표에 이르는 지지로 표출
3	기성 '제도'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반제도주의적 요구	시민운동에 내재해 있는 '신' 사회운동적 성격
4	제도정당에 대한 '외적' 감시 요구	정당의 '근대화' 를 바라는 구(舊)사회운동적 성격

이러한 탈제도정치적인 생활정치 지향은 시민운동의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에서는 시민운동은 제도정치 외부에서의 제도정치개혁운동의 동력으로서도 표출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성제도정치의 정치독점 자체와 제도정치의 한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지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른바 '탈근대적' 지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대의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행위 중의 일부를 제도화된 정치로 합법화하고 제도정치로 반영하게 된다. 본질상 근대대의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를 제도정치로 대의하고 표상하지



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를 제도정치로 한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sup>58)</sup>. 87년 이후의 시민사회의 제도정치에 대한 저항적 역동성은 단순히 개혁적 정당을 구축하는 지향으로, 계급정당을 구축하는 지향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의 국면에서 이러한 지향은 시민운동의 동력으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한편에서 자신의 동력을 분화를 통해 다양한 흐름에 의해 흡수되어 가면서, 새로운 동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시민운동이 담당하고 있던 위의 4번째의 역할, 즉 제도정치 외부에서의 감시운동 내지는 압력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전문적 감시역량의 증대노력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역할은 축소되겠지만, 시민운동의 감시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정상화'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정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은 중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단계와 문제제기만에 의존하는 단계, 나아가 비정략적인 순수성 만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감시운동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나 정당과 같은 '정치사회'의 의제로 부단히 흡수되더라도 새롭게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중장기적인 운동의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야, 시민사회운동의 제도정치 감시운동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여기서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에서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의 변화의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 정상화의 한 영역으로서 제도정치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87년 이후의 변화를 바로보는 사회운동진영의 인식전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87년 이후의 변화과정은 상당부분 예외국가의 정상화—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과정에 있고 이러한 '정상화'를 추동하고 보다 개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운동을 지배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물론 민중운동의 민주주의투쟁 역시도 이를 구성한다. 이러한 정상화 차원 자체는 분명 87년 이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중운동도 이러한 과제에 복무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는 국가 및 지배질서라는 것은 자본제적인 것이고 새로운 계급적·사회적 적대를 내재한 체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대결하고 있는 이러한 정상화과제를

58) 울리히 벡(199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의회, 정당, 노동조합 등 규정된 정치의 장에서 정치를 찾자 하며, 정당한 권한을 인정받은 행위주체가 정치를 수행하길 바란다—만일 정치의 시계가 여기서 멈춘다면, 그 관점에서는 전체로서의 정치적인 것이 멈추어버리는 것이 된다". 벡은 '정치'의 가능성을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정치제도와 정치주체가 "고전적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정치제도와 정치주체의 정치적 독점상황"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Beck, U., 1997, {위험사회}, 새물결). 이러한 '정치'의 정치화를 위한 기획과는 다른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오페(1985)는 신사회운동의 정치를 "대의제적 관료정치제도라는 통로로는 억제되는 않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제도를 정치화"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운동에 의한 행위들을 제도정치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정치로 파악하는 것이다(Offe, Clause, 1985,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Vol. 52).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이 대결하고 있는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 자체의 정상화가 진전되면 될 수록, 사회운동은 포스트-정상화 체제에 대면하게 되고 이와 대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면에서 제도정치의 지체성과 불구성에 대결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과제에 한정하면 '부르주아적 정치지배질서'의 변형의 동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지 그러한 '부르주아적' 질서 자체를 극복하는 인식을 갖는 것은 아니게 된다.

다음으로 국민정부를 경과하면서 제도정치 내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정치세력 간의 관계가 변화하였다고 생각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의 정당질서는 '강력한 보수정당-취약한 자유주의 정당-배제된 진보정당'<sup>59)</sup>의 구도로 짜여져 있었고,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변형주의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상호경쟁하는 보수주의세력과 자유주의세력, 좌절하면서 제도정치에 진입하고자 하는 진보주의세력의 시도로 짜여 있었다고 한다면, 87년 이후, 특별히 국민정부를 경과하면서 '강력하지만 약화된 보수정당-취약하지만 강화된 자유주의정당-제도정당화한 진보정당'의 구도로 변화하는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돌이켜 보면, 87년 6월 민주항쟁은 한국의 보수주의세력이 일대 위기에 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자유주의정치세력은 분열하면서 민주주의이행으로의 결정적 국면인 87년 12월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후 일부(보수적 자유주의세력)는 보수주의세력에 편입되면서(3당합당) 취약한—보수주의세력을 대체하는 대등한 세력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세력으로 존재하여 왔다. 87년에 대선에서 자유주의세력의 승리를 가정한다면, 자유주의세력의 총연합인 YS-DJ연합정부의 형태를 띄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자유주의세력이 오히려 분열하면서(보수적 자유주의세력과 중도자유주의세력), YS는 보수주의정당에 '얼굴마담'으로 영입함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DJ는 보수주의세력이 일부와 연합함으로써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단독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도 이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87년 이후 기성제도 정치세력들 간의 경쟁 구도가—87년 대선에서 자유주의세력(분열 등) 및 심지어 진보주의세력의 잘못된 전략적 선택으로 인하여—지역주의적 경쟁 구도로 변형되었다. 87년 이전 시기에 있어서 보수주의 세력은 독재 세력으로서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었고, 자유주의 세력은 반독재 세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6.29 선언과 12월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대치관계는 지역주의적 세력 간의 대치관계로 변형되었다. 이후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추락'을 멈추고 자신을 방어하게 되었으며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지역주의의 덫에 걸려 '성장'의 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대선은 포스트 양김 시대로의 이행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수정당의 재집권이나 자유주의정당의 연속집권이나의 경쟁구도로 진행되었다. 여기서 노무현이라고 하

59) 이러한 세력구성에 대해서는 조희연, 2000, "민주주의 이행과 정당변화의 다양한 길", {계간 다리} 재창간호, 봄호;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3장 5절 참조.



는 '개혁자유주의'적 인물을 통하여, 민주당의 몰락을 저지하면서 새로운 쇄신과 강화를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된다<sup>60</sup>).

국민정부는 지배블럭 내부에서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세력이 반독재 자유주의적정치세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제도정치 내에서 보수주의세력이 약화되고 자유주의세력이 강화되는 정치적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과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시기에는 국가권력은 일방적으로 제도정치 내에서의 보수주의세력에 유리한, 때로는 물리력으로 보수주의세력의 지배를 보증하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87년 이후에는 이처럼 편향적으로 작용하는 국가권력이 일정하게 '중립화'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보수주의세력에 유리하였고 자유주의세력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국민정부를 경과하면서도 부터는 제도정치 내부에서 보수주의세력과 자유주의세력 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차별성이 극복되었으면 부분적으로는 집권 자유주의세력에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였다. 국민정부 하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이 국가권력과 긴장관계(세무사찰 등)에 돌입하게 되고 양자 사이의 갈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이전에는 친보수주의적 국가권력과 보수언론이 동일한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갈등은 부각되지 않았으나, 반독재 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이 집권세력이 되면서 여전히 친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보수언론이 긴장관계에 돌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 노무현 정부 이후의 사회운동의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거시역사적 관점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몇가지 사회운동의 쟁점 및 과제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토론의 소재로 삼고자 한다. 87년 이후 우리는 정치적 변화와 사회운동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개별사건이나 국면으로서 경험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거시역사적 관점에서 성찰적 체험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한국사회포럼 2003'에서는 던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이라는 거시역사적 맥락, 더 나아가 해방 이후의 맥락에서 국가, 제도정치, 사회운동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향후의 사회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사고함에 있어서도 보다 거시역사적 관점에 서기 위해서이다. 특별히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중도자유주의 개혁정부--보수정당의 재집권이 아니라--의 성립 및 민주노동당의 약진에 대응하여 시민운동과 민주운동, 제도정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풀어갈 것인가하는 과제를 새삼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1)'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60)이번 대선에서의 각 정치세력 간의 갈등의 이념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희연, 2002,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2002년 대통령 선거", 『아웃사이드』 10호

87년 이후 변화의 과정은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자본주의적 정상국가, 혹은 자본제적 민주주의국가로 변형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변형은 지배블럭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시민·민중투쟁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기도 하다.

비정상성(비민주성이나 천민성)이 지배적인 국가 앞에서, 이에 대결하는 투쟁은 비정상성의 정상화라고 하는 과제에 집중해 왔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87년 이후의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이러한 비정상성의 정상화에 주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정상성 자체의 모순과 문제점을 주목하고 그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히 비교사회적 시각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내부의 시각에서 보면 많은 저항지점이 존재하지만--상당히 모범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이제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상성 자체의 모순과 정상성 자체를 대결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사실 87년 이후 사회운동은 민주화 혹은 민주개혁이라는 과제에 집중하여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자본제적 국가에 다름아니며,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맥락에서 그것은 시장지상주의적인 자본제에 다름아니다<sup>61</sup>. 재벌로 상징되는 천민적 자본주의의 천민성 역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천민성 자체가 운동과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이행과정(앞서 필자는 예외국가의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에서 개발독재적 예외국가가 점차 자본주의적 정상국가로, 또한 예외적인 문제들이 전형적인 문제들로 접근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의 시장의 '예외적인' 천민성과 국가의 '예외적인' 반민주주의적 억압성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동혁명적 변화의 과정에서 지배블럭이 정치적 안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실패한) 능동혁명이 강제하는 개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수동혁명의 과정이 다시금 혁명적 위기국면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반공주의적 프레임이 부여하는 거시적 한계, 시민사회의 보수성,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지역주의적 왜곡 등으로 인하여, 지배 자체의 혁명적 위기로 발전하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동시에 '개혁적인' 방식으로 자본제적 민주주의국가로 전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3가지 투쟁전선의 문제가 민주주의전선의 경우 국가의 예외적인 폭력성과 반민주성을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실질화와 확장을 쟁점으로 하는 전선으로 변화하게 되며, 시장의 예외적인 천민성과 반민주성을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서 시장의 합리성과 합리성을 쟁점으로 하는 상태로, 생활세계 전선의 경우 사회적 적대의 폭력적 억압과 주변화를 쟁점으로 하던 상태에

61)돌이켜 보면 60년대에 민중들은 개발독재에 대한 사회운동의 투쟁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냐'는 식의 인식을 하였으나,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가"라는 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개발의 수혜가 70년대 및 80년대의 민중에게는 주어진(given)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점에서 87년 이후 지배와 국가의 변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일면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도--대단히 개혁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배와 국가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서 사회적 적대의 제도화와 체제내적 쟁점을 대결하는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운동이 직면하는 투쟁전선과 쟁점을 자본제적 민주주의—물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규정 하에 있는 자본제적 민주주의—의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파악해가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계급적·정치적 지배질서의 소멸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제적 민주주의'적 지배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 국가민주화와 시장민주화 혹은 개혁이 가속화되면 될 수록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성립, 혹은 과거의 국민정부의 성립은 그 자체로서 진보적인 역사발전의 경로이지만 그러한 진보적인 국가민주화와 시장민주화 자체에만 매몰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된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필자는,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변화라고 하는 분석프레임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상화 차원 자체는 분명 87년 이후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모두 이러한 과제에 복무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는 국가 및 지배질서라는 것은 자본제적인 것이고 새로운 계급적·사회적 적대를 내재한 체제라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의 정상화를 추동하고 실제 이것이 실현되면 될 수록 사회운동은 그러한 정상화를 뛰어넘는 과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상화를 과제로 싸우면서도 이러한 변화를 직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투쟁하던 시기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 시장의 힘에 의한 민주주의의 허구화, 자본제적 민주주의 자체의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제적 정상국가로의 이행이라는 인식은 광의의 민주주의투쟁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민주주의투쟁을 실질화하기 위한 투쟁의 관점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상화된 민주주의 질서' 내부에서의 계급적·사회적 적대와 차별과 대결하고자 하는 전략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2) 사회운동은 민주개혁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제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대로 국가의 정상화와 합리화는 시민사회운동을 제도적 틀 내로 흡수하고 포섭(co-opt)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고 생각된다. 넓은 의미의 국가의 일부를 이루는 제도 정치의 정상화와—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이념적 스펙트럼의 확대(중도자유주의 정파가 지배블럭의 헤게모니 분파로 까지 변화하는 국면)로 인하여, 더욱더 사회운동의 제도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의 제도정치 진입은—의도하지 않게—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전자의 개방성과 포괄성을 확장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동성이 점차 '제도화된 통로'를 통해서 발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필자는 87년 이후의 정치적 자유화가 국민정부의 성립을 계기로 '제도화'의 단계로까지 상향발전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성립으로 국가기구와 제도정치의 정상화로 인하여 많은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제도화된 형태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법원개혁을 위해서 논의되는 배심제나 참심제의 논의를 상기해보자. 물론 이러한 개혁 자체가 유야무야될 수 가능성도 있지만 경향적으로 볼 때, 국가와 정당의 정상화는 제도화의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하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낙선운동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사모적 대중들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민주당이나 개혁국민정당의 '진성'당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87년 이후 수동혁명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국가적 영역에서의 '제도적 공간'의 확장이다. 이것은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다양한 요구들이 '제도'정치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수렴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정상국가의 확립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근대'적인 정치사회의 확립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모순과 이슈들이 일상적인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수렴되는 정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운동은 정상화와 제도화의 도전에 응전하여야 한다.

제도정치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정치지체와 제도정치의 비정상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지역주의였다. 88년 4.26 총선 이후 가시화된 지역주의적 정당질서는 자체의 동력으로—즉 여야당의 노력만으로—극복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의적 구도가 어떤 형태로든 탈지역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제도정치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역주의에 의한 제도정치의 지체성에 의존하는 단계를 과감하게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역설적으로 진보적 정치세력인 민주노동당의 약진으로 인하여, 향후 지역주의에 교착되어 있는 기성정당 간의 경쟁이 탈지역주의적인 방향 및 개혁적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다<sup>62)</sup>. 왜냐하면 "지역주의적 정치구도는—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2김 혹은 3김의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데, 87년 이후 비로서 지역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이념정당이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87년 분열 이후, 양김은 '전국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는 약화된 반면 '지역적' 지도자로서의 지위는 보다 확고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탈지역주의화의 정치혁신이 국민회의를 포함하는 기존 제도정당에 의해 달성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김대중정부가 발딛고 있는 '저항적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개혁정당으로 자기개혁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개혁하는 노력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개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역주의적 정치구도가 극복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저항적 지역주의를 대표했던 김대중정부가 현존하는 여당의 우월한 지위에 안주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패권적 지역주의'를 대표하는 구 여당이 자신을 '지역주의' 속에서 방어하면서 지역주의적 구

62) 2002년 대선에서 TV토론에서의 '권영길 효과'를 상기할 수 있다. 그러한 효과들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쟁이 지역주의적 대립으로 고착되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 불필요한 색깔론이 난무하는 것에 대한 저지효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도 자체를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해법은 불가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재생산하는 지역주의적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이 지역주의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더라도 상대방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지역주의적 논리로서 비판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패권적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 집권여당은 비록 권력을 상실하였지만 지역주의라는 방패막이 속에서 자신을 재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양김 혹은 3김의 존재와 지역주의의 재생산은 분가불리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제도여당의 변신만으로 지역주의가 극복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결국 새로운 진입자가 있어야 한다.<sup>63)</sup>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볼 때,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은 향후의 정당질서의 탈지역주의를 촉진하는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2년 대선 TV토론에서의 '권영길 효과'를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TV토론도 권영길 후보의 참여가 없었다면 다른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권영길 효과'가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경쟁의 성격, 공방의 내용, 각 후보의 정치사회적 위상,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변화시켰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정치적 점진적인 정상화로 인하여, 사회운동이 제도화의 흡인력에 흡수당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동력과 공간을 확장해 내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서술한 대로 민주화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자유화는 자율화의 단계를 뛰어넘어 제도화의 단계로까지 진전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운동영역에서 제도화된 통로를 중심으로 운동이 펼쳐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시민사회운동을 포섭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어떻게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영역과 존재론적 위치를 확보할 것인가하는 점이 문제로 된다. 사회운동은 이제 자신들이 투쟁을 통해서 강제한 '민주개혁' 그 자체를 통해서 '제도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시민운동은 제도정치적 개혁이 아니라 제도정치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외국가의 정상화와 제도화에 대면함에 있어 시민운동은 특별히 새로운 관점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87년 이후 변화과정 속에서 시민운동은 상당부분 예외국가의 정상화--이른바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를 추동하는 운동으로서 발전하여 왔으며, 많은 부분 기성제도정치적 '정치지체'에 기인하는 반사이익에 힘입어 '대의의 대행' 역할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의의 대행' 영역은 불가피하게--거시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sup>64)</sup>. 그동안 제도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이 존

63) 조희연, "한국정치의 혁신과 세력교체", 1999.9.7., 여성백인회관.

64) 특별히 제도정치적 정상화는 시민운동이 담당하고 있던 정치개혁적인 운동의 비중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부상을 규정하던 정치개혁적인 구사회운동의 비중을 축소시키게 됨을

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신뢰성을 갖는 시민운동이 정치개혁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대선에서도 경험하였듯이, 정책감시영역에서 시민운동은--의도와는 무관하게--진보정당과 정책적 친화성을 보이게 되고 간접적으로나마 이를 지지하는 형국이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65)</sup>.

이 점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예외국가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선도하였던 시민운동이 민주주의의 형식성에 협애화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제도정치적 합리화에 의해 빼앗기는 운동의 동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보다 급진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앞서 필자는 낙천낙선운동을 서술하였다. 낙선운동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공존하고 있고, 이것은 시민운동의 약진을 가능하게 하였다. 낙선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의 화려한 부상을 가능하게 한데에는 여러 가지 요구와 열망이 공존하고 있고 시민운동이 이를 배경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87년 이후 시민운동의 '대의의 대행' 현상을 가능하게 한 동력은 기성 제도정당의 개혁적 재편을 향한 지향, 배제된 진보정당 구도를 극복하면서 기성제도정치적 이념적 폐쇄성을 극복하고 이념적 개방성을 요구하는 지향, 나아가 제도정치에 의한 정치독점을 넘어서서 제도정치 자체의 한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신사회운동적인 지향, 제도정당에 대한 '외적 감시'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의 고유한 역할요구 등이 존재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시민운동의 최대의 성과인 낙천낙선운동에서는, 지체된 제도정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란의 정점을 보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지향들이 분화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지향은 노무현 같은 후보의 부상과 노사모 같은 운동의 출현으로, 두 번째 지향은 진보정당의 약진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한 시민운동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급진화'의 관점에 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먼저 제도정치 자체의 정상화 혹은 근대화 문제의식을 뛰어넘어, 제도정치 자체의 한계성을 묻는 급진민주주의적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신사회운동'적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계급정당 까지를 포함하여 근대적 정당 자체의 한계성, 제도화된 권위주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탈각 등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시민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권력감시적'이면서 동시에 '권력지향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사회운동은 바로 이를 뛰어넘어 생활세계

로써, 시민운동이 정치사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여 갈 것인가하는 점은 앞으로 과제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65) 2002년 대선 기간 동안 시민단체의 연합 대선감시단체인 '대선유권자연대'는 후보정당들의 정책비교를 하였는데, 이때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간 개혁적'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물론 현실성(feasibility)이라는 기준을 도입하면 다르겠지만,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시민단체의 요구사항과 가장 친화적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적 이슈, 가치적·문화적 이슈들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급진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사실 87년 이후의 시민운동은 앞서 서술하였듯이--비정상적인 제도정치를 근대화하고 확장하는--구(舊)사회운동적 성격과--근대적 제도정치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신(新)사회운동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제 후자의 측면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실 원래의 시민운동은 이러한 탈제도정치적인 급진성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필자는 민주주의전선, 계급전선, 생활세계전선을 분석적으로 나누었다. 전자의 두가지는 주목을 받았지만 생활세계전선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신사회운동적 문제의식은 특별히 생활세계전선의 다양한 이슈들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이러한 탈제도정치적인 생활정치 지향은 시민운동의 향후 방향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에서는 시민운동은 제도정치 외부에서의 제도정치개혁운동의 동력으로서도 표출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성제도정치의 정치독점 자체와 제도정치의 한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지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대의민주주의는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행위 중의 일부를 제도화된 정치로 합법화하고 제도정치로 국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질상 근대대의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를 제도정치로 대의하고 표상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를 제도정치로 한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87년 이후의 시민사회의 제도정치에 대한 저항적 역동성은 단순히 개혁적 정당을 구축하는 지향으로, 또한 계급정당을 구축하는 지향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의 국면에서 이러한 지향은 시민운동의 동력으로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민운동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 즉 제도정치 외부에서의 감시운동 내지는 압력운동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역할이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정상화'라고 하는 것도 장기적인 과정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은 중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다 전문화된 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반사이익에 의존하는 단계와 문제제기만으로 나아가 비정략적인 순수성만으로 인정받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감시운동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정당과 같은 '정치사회'의 의제로 부단히 흡수되더라도 새롭게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중장기적인 운동의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럴 때 이러한 외적 감시운동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도정치의 지체성에 힘입어 대의의 대행기구로서의 '반사이익'을 점차 적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탈제도주의적인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자신을 확장한다면, 시민운동의 동력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체된 제도정치의 정상화라는 문제의식에 안주되어 간다면 그것은 제도정치의 합리화와 정상화에 따라 부단히 동력을 잠식당하게 될뿐더러, 제도정치의 합리화의 보조운동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세계화와 대결하는 '해방적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의 과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새로운 운동의 차원을 확보하려는 인식전환은, 세계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한다. 근대적 정당정치의 한계성은 민족국가적 정치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이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정치 자체의 성격의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6)</sup>. 더구나 근대 민족국가에서 복지국가를 포함한 진보적 정치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장 혹은 경제사회의 정치적 규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해체되어가고 있다.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치 자체의 역할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민족국가적 정치의 한계성은 대단히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 동력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해방적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글로벌 정치 자체의 진보화를 문제삼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급진민주주의적 인식을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하는 과제를 시민운동이 짚어야 한다. 이는 제도정치의 부르주아적 합리화를 뛰어넘는 급진성, 또한 제도정치 자체의 근대적 한계성을 뛰어넘는 급진성, 민족국가적 정치를 뛰어넘는 글로벌 급진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는 한, 일국적 차원에서는 제도정치의 확장 속에서 시민사회의 동력이 상당부분 제도화되거나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를 초국민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국가적 시민권의 영역을 넘어서서 시민권이나 노동권의 문제를--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 등--확장하려는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분적인 진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은 국민국가적 시민권, 불구화된 제도정치의 근대화라는 문제의식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민중운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에 비해서 이러한 관점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민중운동 역시 국민국가적 저항을 넘는 국제주의적 전망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계사회포럼이라 아시아 사회포럼의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고려할 때, 한국의 민중운동은 국민국가적 전망에 '유폐'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운동에서도 국민국가적 인식지평을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대기업 노동조합과 조직화된 노동조합운동이 일종의 '기득권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물론 우리의 경우 조직노동운동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지만--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진행되는 민주정부의 경제적 자유화 정책은 조직적 저항력이 있는 중심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타협적으로 인정하고 조직적 저항력이 없는 부문이나 새롭게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부문,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시민권의 국민국가적 한계에 의해 노동권의 보장이 거부되는 부문들을 중심으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핵심적인 노동자계급은 비정규직 노동자, 주변적 노동자, 불안정·불안정 노

66) Bob Jessop은 세계화가 가져오는 국가의 변화를 '국가성격(性)의 탈민족국가화(denationalization of the statehood)', '정치의 탈국가화(de-statiz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정책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policy regimes)'로 표현한 바 있다("The State and the Contradiction of the Knowledge-Driven Economy", J.R. Bryson, P.W. Daniels, N.D. Henry and J. Pollard eds., Knowledge, Space, Economy, London: Routledge, 2001).



동자, 특수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자본의 위기가 심화된거나 개량의 물적 기초가 박약해지는 국면에서는 조직적 저항력이 있는 중심적 부문에 까지 자본의 비타협적 공세가 진행되었지만, 자본의 상대적인 안정성이 존재하는 강화에서는 이중적인 분리전략이 구사될 것이고 실제 그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핵심적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자유화의 촉복에 만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않된다고 생각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러한 이중성을 용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확대연대전략은 결국 국민국가적 차원을 넘는 반세계화 투쟁, 노동자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는 이미 자본운동의 세계화라고 하는 조건 위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sup>67)</sup>. 해방적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노동권과 시민권의 초국민국가적 확장의 관점을 더욱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sup>68)</sup>. 나아가 아시아적 차원과 글로벌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연대를 위한 투쟁(예컨대 아시아 사회권 및 평등노동권 실현을 위한 투쟁 등)에 민주노총이 힘있게 나설 수 있는 글로벌 연대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9.11테러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불량국가'로서의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적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전선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이라크 전쟁 반대운동에--다른 단체도 그러하지만--민주노총과 같은 세계적 단체가 앞장서지 못하는 현실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적 정책의 현상이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한반도, 특별히 남한의 사회운동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범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중요한 현장이자 선도지역이 될 수 있다.

**(5) 새로운 저항담론으로서의 공공성담론**

앞서 이야기한대로 한국사회의 문제는 점차 예외적인 자본주의의 천민성이나 예외적인 독재체제의 폭력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제적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문제로 근접해가고 있다.

67) 조희연, 2001,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안행동", 조희연 편, 『NGO가이드』, 한겨레신문사.

68) 3)의 논의와 4)의 논의를 종합한다면, 87년 이후 수동혁명적 변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진보담론, 민주주의담론, 개혁담론, 사회운동담론은 3가지의 확장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위로부터의 국가민주화'를 추동하면서 그것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정부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민주개혁', 즉 국가민주화의 긍정성을 뛰어넘어 그것을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민주화의 과제를 뛰어넘어, 시장의 민주화로, 생활세계의 민주화로 그리고 성찰적 민주화로 사회운동적 실천을 확장하는 것이다. 진보운동을 단순히 진보적 '정치'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으로, 나아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운동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셋째는 시장 및 지배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대항담론의 재정립이다. 과거의 근대화담론이 이제--'신(新)근대화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세계화담론으로 전환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화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민중적·시민적·공공적 이해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보담론을 확장하고 재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 자본제적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굴절되고 왜곡되는 자본제적 민주주의이다. 그런 점에서 예외적인 비정상성과 비민주성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위협받는 자본제적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문제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자본제적 시장질서의 폭력적 결과에 대응하는 공공성 담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개발독재적 예외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또한 87년 이후 민주주의이행을 통해 정상화되는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해가는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제적 민주주의'는 그동안 국민국가 내부에서 투쟁을 통해서 쟁취하였던 수많은 사회적·정치적 성과물들이 무력화되어가고 허구화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시장의 논리는--형식적으로는 정상화되는--민주주의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생활세계의 다양한 적대를 격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장에 대한 사회적·공적 규제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게 된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입장에 서더라도, 시장의 폭력성과 가혹성을 규제하기 위한 국내적·국제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교육문제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하자. 예컨대 교육문제를 둘러싸고는 두가지 힘이 각축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하나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강고하게 존재하여 왔던 학벌 기득권체제를 약화시키려하고 하는 힘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의 질서에 조응하는 형태로 기존의 학벌체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힘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경제적 불평등을 상쇄하는 평등화기제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평등화기능을 하던 교육체제(공교육 포함)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상층은 평준화체제를 해체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기제로서 교육체제를 재편하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강화된 시장의 힘이 개발독재 하에서 대중적인 고등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평준화 교육체제마저 무력화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학벌철폐운동 및 교육민주화운동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대항하면서 '시장의 해체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을 지켜내어 경제적 불평등의 상쇄기능을 지속하도록 하며, 기존의 공교육체제 내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학벌기득권체제의 약화 및 해체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만일 '시장의 힘이 승리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경제적 불평등의 상쇄기제가 아니라 바로 경제적 불평등의 재생산기제의 중요한 일부로 정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 유지의 한 예가 될 것이다. 강화되는 시장의 힘은 계급전선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허구화시키며, 생활세계 전선에서의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87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의 동시적 진행 속에서 이제 대항담론이 민주개혁이라는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이미 제도정치와 국가합리화의 보조적 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혁적인



노무현 정부의 성립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은 강화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가 국민적 수준에서는 공공성 담론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 대항담론의 핵심적인 측면이었던 민주화가—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지배담론으로 수용되면서, 민주화의 불철저성과 민주화의 새로운 모순을 쟁점화하고 그것을 급진화하는 방향으로 대항담론의 성격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저항은 처음에는 반신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민중적 사회운동에 협애화되었으나, 점차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항하는 민중적 운동과 다양한 (비판적) 시민적 운동(지식인운동, 종교운동 등)의 연대가 형성되게 된다. 신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은 구자유주의시대의 일반민주주의 투쟁과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일반민주주의 투쟁의 사회적 기반이 넓을 수 있다. 20세기의 노동자투쟁을 통해서 획득된 '사회성 박탈'을 동반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의 기반은 이전에 비해 확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시대 대항담론의 중요한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의 유지에 있게 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는 세계화 담론에 대항하여 공공성 확보가 대항담론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포함되게 된다. 87년 이후의 흐름 속에서 반세계화, 세계화의 핵심적인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공공성 유지와 확대가 대항담론 변화의 핵심적인 측면이 되게 된다<sup>69)</sup>.

새로운 지배담론으로서의 세계화담론이 과거의 담론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자본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근대화담론이 기본적으로 국민국가적 축적기반을 갖고 있는 초기산업화 단계의 자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자본은 범지구적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지구적 축적을 수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운동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하는 세계화 담론의 부상에는 대항담론이 세계화의 모순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초국민국가적·국제주의적 대항담론으로 재구축할 것인가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면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는 초국민국가적 연대성의 실현이 저항세력에게 문제로 된다. 실제 세계화가 지배담론의 주요한 측면이 되면서, 대항담론이 어떻게 민족국가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형을 자기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된다. 이러한 대항담

69) 이러한 새로운 대항담론으로서의 공공성 담론은 경제적 대항담론의 성격변화를 보여준다.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이 혁명적 민주주의운동으로 변화하고 이와 함께 혁명적인 반자본주의적 담론으로 고양되어 갔다고 하면, 87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의 동시적 진전 속에서는 사회주의 붕괴의 영향으로 인하여 반자본주의담론은 주변화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대안체제로 상정되는 공산주의체제의 붕괴는 '대안이 없다'(TINA: There is no alternative) 증후군을 확산시키면서 반자본주의적 담론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 담론은 '적극적' 담론의 성격 보다는 '방어적'인 성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성 담론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 복합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보적 담론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사회적 자유주의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 담론의 중요성은 세계화의 과정 자체가 결정론적 과정이 아니고 정치적·사회적 세력 간의 투쟁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이종보, 2002, 「한국사회의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각축과정 연구-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심으로」,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론의 형성과 확산과정에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진보정당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발전주의 혹은 성장주의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공공성 담론을 확장하기 위해서도, 발전주의 혹은 성장주의 담론에 대한 극복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적 수준에서 지배담론으로서 발전주의나 성장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민주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와 같은 담론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신근대화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시민사회 내에 발전주의가 뿌리깊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의 치적을 경제성장률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과거 개발독재적 예외국가 하에서 '중상주의적 발전주의'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민주정부' 하에서 세계화에 매개되면서 일종의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에 강력하게 영향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지배담론의 강화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뿌리깊은 발전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새로운 담론에 의해서, 이제 80년대 이후의 개방주의적·시장자율적 발전주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로 강화되어 시민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영어를 자르기 위해 아이의 혀를 자르는' 영어광풍, 영어공용화론이 미치는 광범한 영향력도 이러한 토양 위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주의는 반공주의와 그 이면으로서의 친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보호막 속에서 도전받지 않은 채로 존재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주의 자체에 도전하지 않는 한 세계적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도전할 수 없으며 공공성 담론도 옹호해 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의 투쟁의 대상은 '외재하는' 권력에 대한 대항이나 감시를 넘어서, 시민사회 자체의 성찰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7)언론을 '권력기관'에서 '보도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사회운동을**

국가와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공론영역'이 존재할 때 비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개혁의제를 선택적으로 굴절시키는 언론이 변화하지 않을 때 이러한 공론영역은 불가능하게 된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경쟁·수렴되는 공적인 장으로서의 공공영역, 그 일부로서의 공론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굴절과 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론영역의 불구화는 바로 공론을 담당하여야 할 언론의 불구화에서 비롯된다. 공공성 담론의 국민화와 발전주의 담론의 극복 역시 이러한 바른 언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서 서술한 국가와 제도정치에 '정상화'에도 불구하고—필자는 이 글에서 이 정상화를 뛰어넘자는 논지를 전개한 것이다—언론 영역은 '정상화'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장 후진적인 개혁영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점에서 언론이 현재와 같은 권력기관 혹은 권력기관으로서의 의식을 갖는 기구에서 '보도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범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